

2017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용역 최종보고서

---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개발

---

(사) 한국정당학회

## 목 차

I. 연구개요 .....	2
II. 토론의제 총괄표 .....	10
III. 분야별 토론의제 총괄표 .....	12
IV. 분야별 토론의제 .....	36
1. 정치 분야 .....	36
2. 외교 분야 .....	83
3. 경제 분야 .....	121
4. 사회 분야 .....	164
V.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단 명단 .....	201



연구 개요

# I. 연구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조기 대선으로 인한 철저한 대통령 후보 검증의 필요성
- ▶ 정책 중심의 후보자토론회 개최 필요성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대통령 후보 검증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2번째로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져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제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소위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 활동을 벌여왔고, 촛불 집회를 통한 탄핵 찬성 열기가 광장을 메웠던 바 있다. 반대로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탄핵 반대 모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는 검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19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 제6공화국의 87년 체제 하에서 6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경험한 바 있다. 대선이 열리는 시기마다 대권 후보의 인성과 공약에 대한 검증은 늘 화제의 중심이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발달하면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민들의 검증 요구는 점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선거법에 의해 설립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관련 TV 토론회를 관리해 오고 있다. 사실 대통령후보 TV 토론을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선거관련법에 후보 TV 토론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후보 검증 욕구는 높은 편이다.

현재 선거 관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있어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라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실제로 갤럽의 2012년 대선 사후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퍼센트 이상이 TV토론을 투표 후보 결정시 참고한다고 밝혔다. TV 토론회의 시청률은 선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 토론회에서는 1, 2, 3차 각각 전국 40.8%, 43.6%, 36.1%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선거 때 토론회가 오직 이 세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영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토론회 진행방식 등과 관련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 1분, 답변 1분 30초로 시간제한이 엄격히 적용되었고, 전체 112분 동안 사회자 발언 시간이 16분에 달해 시청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반론과 재반론 기회 역시 거의 주어지지 않아 ‘토론 없는 토론’이었다는 비판 역시 존재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선 토론회는 3차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 다른 분야를 설정해 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차 토론회는 ‘정치,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정치, 행정 개혁, 안보, 권력 구조 개편, 통일, 외교 등을 다루고 2차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 금융 개혁, 재벌 정책, 경제 현안, 물가 안정 대책 등의 주제를 다루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이 광범위하고 제한적이지 못해 ‘정책 중심’의 소위 끝장 토론이 쉽지 않은 한계도 노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TV 토론회에서 나타난 중심 주제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특정 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화되어 후보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제1차

토론회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과 ‘국제적 정세와 미국 군대의 활용’ 등등 비교적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선 토론회가 진행되는 도중 또는 토론회 직후 토론에서 다뤄진 주제, 정책, 발언들에 대해 ‘팩트 체크’(fact check)를 하는 것이 활성화 되어 있다. 주요 언론과 각종 정책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사실인지를 확인해 기사와 정보를 올리는 것인데, 특히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산하 애너버그 공공정책연구소(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APPC)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팩트체크’(www.factcheck.org)는 한 때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되기도 하였다. 팩트 체크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폴리티 팩트’라는 웹 사이트는 정치인들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며 토론 이후 후보자들의 주요 발언을 거짓말 정도의 단계로 나누어 수치를 발표하는 식이다. 이러한 ‘팩트 체크’ 활동은 후보자로 하여금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깎아 내리기에서 벗어나 사실에 기반한 정책 중심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후보 검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대선 때보다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올해 대선의 경우 보다 특화되고 깊이 있는 토론 질문 의제를 제대로 구성하고 준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 2. 연구 내용

- ▶ 실용적 문제해결 중심의 의제 제시
- ▶ 차별적 의제 제시
- ▶ 미래지향적 의제 제시

한국정당학회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의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노하우를 축적한 바 있다. 한국정당학회에는 한국의 정치와 행정, 외교와 안보, 경제와 민생, 사회와 복지, 교육

과 환경 등 제 분야에 대한 전공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 각 분야의 최고연구진들이 유관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의를 거쳐 진행해 온 2017년 19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의제 개발 프로젝트는 1) 실용적 의제, 2) 차별적 의제, 3) 미래지향적 의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실용적 의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21세기 민주화 시대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중 하나는 바로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시대 대통령들은 가부장적 혹은 권위적 리더십에 의지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화 투쟁 경력 혹은 개인적 성공 경험을 통해 쌓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라의 큰 어른” 정도의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일방이 맞고 다른 상대방은 틀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배출할 때가 되었다. 타협과 협상을 중재하고 국민 통합을 모색하는 일을 일상적 업무로 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문제해결 중심의 의제를 질문하여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차별적 의제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무와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 또한 경쟁적 정당 정치라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일부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 후보들의 서로 다른 시각과 세계관, 정책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토론 의제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마련, 남북관계 해결 등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슬로건이나 립서비스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경쟁하여 국민들이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신선한 자신들만의 정책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후보들에게 주어지는 토론 질문 또한 차별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듣기에 좋은 답변만을 하도록 질문이 주어진다면 대선 후보 토론회는 그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좋은 질문이 다른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미래지향적 의제에 치중하였다. 물론 대통령 후보들의 이력과 경력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하고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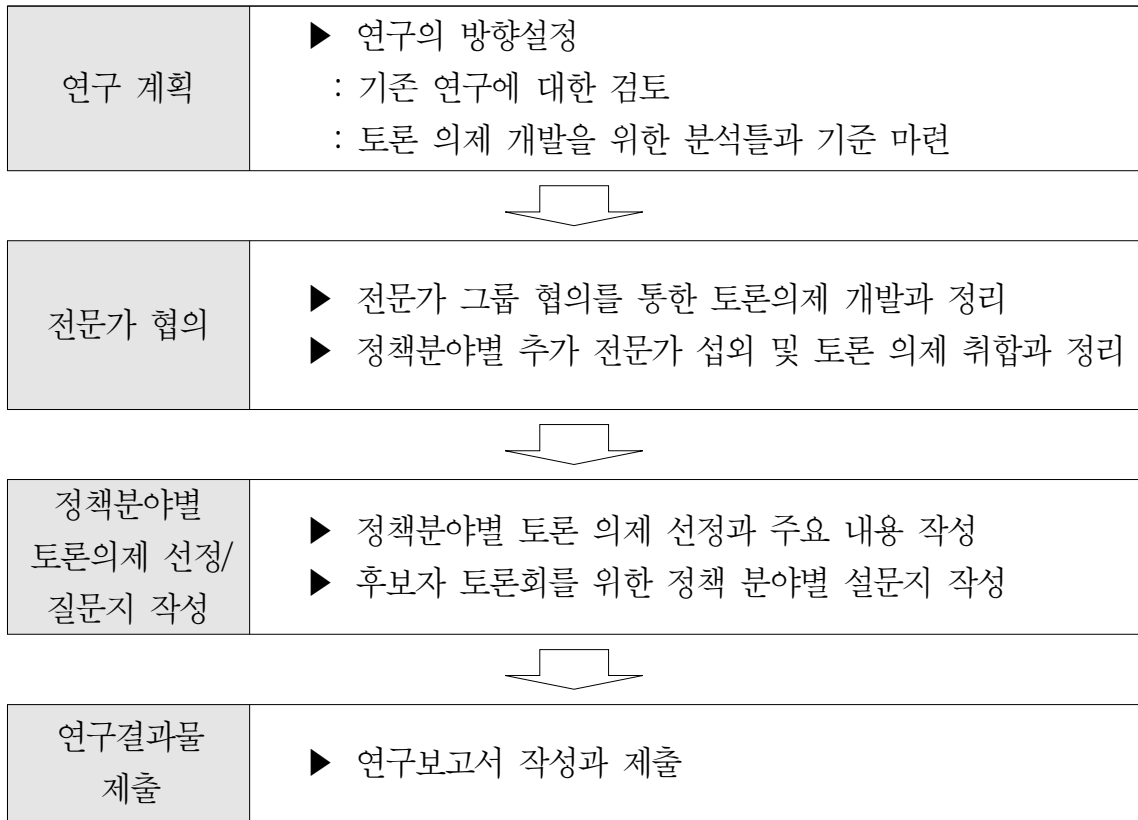
져 있다. 오히려 토론 과정을 통해 드러날 후보들의 미래지향적 리더십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들과 더불어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는 미래의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시각과 사고가 21세기 통일 한국과 공정 사회를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상대당 후보 깎아내리기 혹은 과거 경력만 강조하는 과거 회귀적인가 판별해야 한다. 질문 의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 3. 연구 방법

- ▶ 전문가 참여와 조사를 통한 핵심적 토론의제 개발과 정리
- ▶ 대선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위한 정책분야별 질문지 작성

본 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분야별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한국정당학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후보자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정책분야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된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총괄적으로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위 과정에서 조사결과의 적실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당학회는 정책 분야별로 균등한 인원의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였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이 편향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 외교, 안보, 통일,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여성 등 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당학회 외에도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등의 전문 학회에서 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이에 더해 학계 외에 정부와 국회, 비영리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또한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전문가 협의 과정은 1차로 각 정책 분야의 토론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토론 의제는 토론의 전체적인 구성을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하

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각 정책 분야별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각각의 토론 의제에 대해서는 학계 이론, 언론 보도, 통계 수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당 토론 의제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토론 의제는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관 질문 혹은 보완 질문을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토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토론의제 총괄표

## II. 토론의제 총괄표

분야	분야별 주제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리더십</li> <li>■ 정치 개혁</li> <li>■ 국정 운영</li> </ul>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li> <li>■ 안보</li> <li>■ 외교/통상</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개혁</li> <li>■ 경제성장 및 일자리</li> <li>■ 민생</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여성</li> <li>■ 교육/과학/환경</li> <li>■ 사회/문화</li> </ul>



## 분야별 토론회 총괄표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 <시대정신과 국가비전>	
토론 의도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통령이 추구할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십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Q)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위기 가운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만큼 새로운 대통령이 주도해 가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후보들의 리더십 비전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안과 밖으로 여러 중대한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며, 대통령으로서 이를 구현할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토론 의제 #2 <대통령 인성 및 자질 검증>	
토론 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로서의 경쟁력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홍보 능력 검증
토론 질문	Q)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통령제도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대통령제 시스템이라고는 해도 대통령 한 명의 성격과 태도, 스타일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함께 토론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을 간단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토론 의제 #3 <인사 정책 및 측근 관리>	
토론 의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부 인사 권한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과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철학과 정책, 그리고 측근 관리 방안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Q)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 권한이 큰 만큼 이를 제대로 잘 사용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 정권 초기 특정 배경을 가진 집단 혹은 비리에 노출되어 있던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고 이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쉽게 상실해 버린 적이 많습니다. “고소영” “성시경” 등 대통령의 인사실패에 대한 풍자적 비판이 시중에 넘쳐 날 때 대통령의 리더십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많은 측근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악순환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19대 대선의 경우 당선 직후 곧바로 인선을 완료하여야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어떠한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측근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토론 의제 #4 <적폐청산과 사회통합>	
토론 의도	<p>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대선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검증</p>
토론 질문	<p>Q)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촛불, 흙수저와 금수저 등으로 대변되는 이념, 성, 계층, 지역간 갈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진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과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국민통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토론 의제 #5 <대통령과 재난 대처>	
토론 의도	<p>과거와 달리 한국은 대형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재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p>
토론 질문	<p>Q)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대규모 자연재난 및 인적·사회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재난의 경우 그 성격이 복합적이고, 대형화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인근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지방정부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p> <p>그런데도 정부가 세월호나 메르스, 구제역 등의 재난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국민의 원성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재난 대응 조직과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토론 의제 #6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토론 의도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보유하고 남용하여 결국 민주주의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비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서의 작은 청와대 개혁 방안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p>Q)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1인에게 인사권한, 사정권한, 예산권한 등이 집중되어 있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작은 청와대”를 위한 후보들의 공약은 늘 제시되어 왔지만, 결국 당선 및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키우고 측근 정치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 권력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3가지 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토론 의제 #7 <검찰 개혁>	
토론 의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과 검찰의 권력 분산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검증
토론 질문	<p>Q)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권은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있었으나 제식구 감싸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제어할 제도들을 시행했으나 그 효과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의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이견이 팽배합니다.</p> <p>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차기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후보들께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토론 의제 #8 <개헌 의제 및 권력구조 개편>	
토론 의도	국가대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개헌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과 개헌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p>Q) 우리 정치의 역사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패를 맞보기 일쑤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문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합니다. 지금 정치권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p> <p>이러한 맥락에서 후보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핵심 골자는 무엇입니까? 또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구조의 어떤 부분의 개헌에 힘쓰고 싶습니까?</p>

정치 분야 토론 의제 #9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토론 의도	1995년 지방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2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함.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구유출이 겹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 도출.
토론 질문	<p>Q)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는 국정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헌법 제1조에 규정했습니다. 주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분권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경우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은 7:3 정도로 여전히 중앙정부가 중요한 권한을 다 쥐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8:2 수준으로 재정권 역시 중앙정부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0 <대통령과 연합정치>	
토론 의도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은 국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기에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후보자의 비전과 전략의 검증
토론 질문	Q) 후보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시더라도, 후보님의 정당은 국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다면, 치열했던 선거전을 뒤로 하고, 다른 정당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1 <대통령과 국회 관계>	
토론 의도	대통령의 국회 관련 인식 및 전략에 대한 검증을 통해 향후 대통령과 국회 관계를 예상해 봄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의제가 어느 정도 입법화될 수 있을지 가능해 보는 기회
토론 질문	Q)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Legislator-in-chief”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화 시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국회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개혁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전략은 무엇인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정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2 <대통령과 정당 민주화>	
토론 의도	여전히 후보선출 과정 등에 있어 정당의 당내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정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검증
토론 질문	Q) 대통령은 헌법 규정대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정치 현실적으로 볼 때 특정 정당의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은 국회에서 법안 표결 시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특히 선거 시기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공천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공천 학살을 통한 정치 보복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후보님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신의 소속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 가시겠습니까? 정당 내 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3 <대통령과 언론개혁>	
토론 의도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언론이 이와 같은 사태를 키워왔다면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언론개혁이 또 다른 방식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함. 이에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토론 질문	Q) ‘기레기’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그 자체로 언론에 대한 외압,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언론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4 <대통령과 공약>	
토론 의도	후보자 및 차기 정치 리더로서의 공약의 검증과 이행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검증
토론 질문	Q) 차기 정부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빚은 일련의 사회적 혼란들을 재정비할 큰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볼 때 대통령은 항상 공약 이행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결과는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반복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보자들은 현재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거 공약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또한 당선 후 시민이 공약의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5 <정치소통과 국민참여>	
토론 의도	과거와 달리 국민은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정치인 역시 선거 시기와 재임기간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음, 소셜미디어는 소통과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토론 질문	Q) 개방성, 확장성, 양방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새롭고,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합적으로 표출되는 의견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정치행보에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없던 과거와 현재의 정치소통 양상이 실제로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국민참여는 활발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각 후보께서 생각하는 소통 대안은 무엇입니까?

**통일 분야 토론 의제 #1**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b>토론 의도</b>	<p>지난 20여 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포용정책과 강압정책을 번갈아 시행하면서 일관성을 잃었으며 정책적 효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를 의도</p>
<b>토론 질문</b>	<p>Q)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 10년간은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은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하는 대북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통일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북한의 위협 억지와 남북관계 발전, 통일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통일 분야 토론 의제 #2**  
**<대북 안보정책: 한반도 비핵화 전략>**

<b>토론 의도</b>	<p>북핵문제가 1990년대 초반 불거진 후 4반세기가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각 후보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현재 북한의 핵 능력과 주변 국가들의 북핵 정책을 고려할 때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의도</p>
<b>토론 질문</b>	<p>Q)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지난 2006년 이후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강화하면서 핵보유와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현재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p>

<b>통일 분야 토론 의제 #3</b> <b>&lt;대북 경제정책: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재개 여부&gt;</b>	
<b>토론 의도</b>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인데, 각 후보들은 남북 경협 효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향후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 제시를 의도
<b>토론 질문</b>	Q)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남북경협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함께 경협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후보들께서는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협 재개가 필요하다면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언제쯤 재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남북 경협 재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통일 분야 토론 의제 #4</b> <b>&lt;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책&gt;</b>	
<b>토론 의도</b>	북한 문제는 남북한관계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각국과 맺는 정치, 군사, 경제를 망라한 외교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북핵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및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이 시급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해결방안을 묻는 의도
<b>토론 질문</b>	Q)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 정부들은 물론 인권단체들이 북한을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범죄로 정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과거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북한정권의 정치권 시민권 탄압에 대한 강한 비난과 압박을 강조하는 입장과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권, 사회권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데 국내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지원과 지지를 얻으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해야 할지, 특별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북한정권이 핵도발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한반도 안보, 평화, 인권에 도움이 되도록 할지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b>안보 분야 토론회 #1</b> <b>&lt;한중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의 조화방안과 우선순위&gt;</b>	
<b>토론 의도</b>	<p>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경제 동반자인 동시에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가로 때때로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각 후보들이 대 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아갈 것이며, 혹 그 중 우선순위를 택해야 할 경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지에 대한 구상 및 계획 검증</p>
<b>토론 질문</b>	<p>Q)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는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과 그에 따른 성장에 동반하여 빠르게 증대되어 왔으며, 2016년 현재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출입대상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그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역학에 따라 때때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 발표된 사드 한국 배치 발표 이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한국 측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각 후보들께서는 앞으로 되풀이 될 수 있는 한중간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중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생각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b>안보 분야 토론회 #2</b> <b>&lt;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gt;</b>	
<b>토론 의도</b>	<p>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북핵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에, 한국의 일부 대통령 후보들은 대북 포용을 강조하는 정책 성향을 보임.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효과적인 한·미간 정책조율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검증함</p>
<b>토론 질문</b>	<p>Q) 최근 북핵정책 검토를 끝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현 국면에서 미국과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다 포용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포용정책을 추진하신다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미국 측을 설득하고 정책을 조율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p>

안보 분야 토론 의제 #3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협력>	
<b>토론 의도</b>	5차례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의 진전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현실화함. 자체 억제력 강화와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검증함.
<b>토론 질문</b>	Q) 북한은 이제 한국에 실질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간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보 분야 토론 의제 #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안보협력>	
<b>토론 의도</b>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기인한 2016년 11월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유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검증
<b>토론 질문</b>	Q)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과정에서 국내 여론 수렴 미흡으로 인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 자위대의 개입 여부에 대한 국내의 불신감이 큰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일안보협력의 필요성 차원에서 한일안보협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후보들께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한일안보협력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 분야 토론 의제 #1**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한국의 외교전략>**

<b>토론 의도</b>	<p>한국은 그동안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 양 강대국간 이견이 증폭되면서 한국 외교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의도</p>
<b>토론 질문</b>	<p>Q)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기본적인 대외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외적 팽창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적극적 대응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안보이슈에서는 미국과 함께 한다는 비판을 합니다.</p> <p>이러한 갈등은 북핵, THAAD, 자유무역 등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들께서는 미중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략과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외교/통상 분야 토론 의제 #2**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b>토론 의도</b>	<p>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합의에서 기인하는 국내외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p>
<b>토론 질문</b>	<p>Q)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발표된 위안부 합의는 그 이후에 국내적 반발과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은 담화문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의 문구를 내세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협상은 커녕 국내외의 소녀상의 철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2015년 양국간 합의는 지난 정부에서 한일 양국 간 외교관계의 교착을 가져왔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 것이 현실입니다.</p> <p>후보들께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밝혀주시고, 국내적 갈등과 한일관계의 교착을 개선할 수 있는 위안부 합의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외교/통상 분야 토론회제 #3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	
토론 의도	한국의 2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한미관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뚜렷이 관찰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에 대한 각 후보들의 준비 상태 및 대응 방안 검증
토론 질문	<p>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 수년간 공들여 완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에서 탈퇴하였으며, 뒤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들의 재협상, 또 대미무역흑자 폭이 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US Free Trade Agreement)은 재협상 대상 자유무역협정으로 고려되고 있고, 대미무역흑자 폭이 큰 한국 역시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외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국의 상황과 대미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는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p> <p>후보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아가야 할 것인지, 특히 안보와 경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미관계에서 대미 통상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외교/통상 분야 토론회제 #4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와 China Plus One 전략>	
토론 의도	한국의 과도한 대 중국 경제의존도에서 비롯되고 확대된 경제산업적, 국제안보적 위기상황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
토론 질문	<p>Q) 현재 한국의 대 중국 경제의존도는 수출입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략 25%~30%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 인접 국가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가 정치경제적, 정치안보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p> <p>더구나 2016년 이후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또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경제 제제가 현실화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현재의 한국의 대 중국 경제의존도가 정말 지나친 것인지,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주시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경제개혁 분야 토론 의제 #1 <경제 민주화>	
토론 의도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각 후보의 이해 정도와 입장을 확인 및 추진 방안 파악
토론 질문	<p>Q) 지난 대선 과정이후 경제와 관련하여 경제 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현재에도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다소 충돌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경제 질서와 정치적 의미인 민주화를 합성시킨 용어인 까닭에 그 의미 자체를 놓고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후보께서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p> <p>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경제 주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데,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적 영향력을 경제 민주화의 걸림돌로 적시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어떠한 경제 주체나 영역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p> <p>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보호, 순환출자에 의한 대기업 지배력확보에 대한 규제,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후보께서 추진하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여 주십시오.</p>

경제개혁 분야 토론 의제 #2 <재벌개혁>	
토론 의도	재벌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내부거래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입장과 정책적 대안 파악
토론 질문	<p>Q)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경제분야 정책공약 중 공통된 것의 하나로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재벌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규제와 행위 규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지 말씀해주십시오.</p> <p>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산분리, 감사(위원회) 강화,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 등의 방안들이 제안되는데, 후보자들께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비정상적 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더불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벌기업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경제개혁 분야 토론 의제 #3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개입의 방향성과 정책>	
토론 의도	최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현재 구조조정 중이거나 구조조정이 완료된 사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성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 파악.
토론 질문	<p>Q) 최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치권의 의지가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와 같이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 동시에 기업자구안의 규모 및 고통분담이 관련 하청업체에만 전가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p> <p>(1) 후보자들께서는 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개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2) 그리고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방향이 적절한지, 또한 최근한국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칙 아래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p>

경제개혁 분야 토론 의제 #4 < 4차 산업혁명과 금융개혁 >	
토론 의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는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 시급히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토론 질문	<p>Q) 디지털 금융 산업 시대에서 첨단기술의 접목이 활성화되면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의 법제도는 이런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신산업의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의 법제도적인 환경이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얼마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면 그 방향성 및 내용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분야 토론 의제 #1 <저성장 시대의 경제성장 전략>	
<b>토론 의도</b>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가 장기적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문제의 주요 원인 및 대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한국 경제성장률이 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 이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은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성장둔화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현상으로서,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요소투입형 경제정책과 수출주도성장전략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p> <p>저성장의 추세와 한국형 장기불황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p> <p>후보들께서는 한국형 장기불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정책의 비전/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방향성 아래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정책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분야 토론 의제 #2 <일자리 창출 정책과 그 실현 가능성>	
<b>토론 의도</b>	일자리창출에 대한 청사진과 정책,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파악
<b>토론 질문</b>	<p>Q) 모든 선거에서 항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이 무수히 남발되었지만, 현재 한국의 실업인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p> <p>일자리 창출이 바로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같은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p> <p>후보자들께서는 우선 왜 최근의 일자리 정책들이 실패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주시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시된 정책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부탁드립니다.</p>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분야 토론 의제 #3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 및 대책>	
<b>토론 의도</b>	청년실업률이 12%를 넘는 현실에 대한 후보자들의 원인 진단과 정책 대안 파악.
<b>토론 질문</b>	<p>Q) 한국의 청년의 90%가 ‘헬 조선’에 공감하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약 45만명, 청년실업률이 12%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구백’ ‘4포세대’ ‘5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와 같이 청년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자조적인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후보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p> <p>청년실업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의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의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변화하는 인구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p> <p>후보들께서는 현재의 청년실업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구조적 변화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분야 토론 의제 #4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	
<b>토론 의도</b>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저출산/고령화라는 추세에 대한 원인 및 진단 대하여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에게는 노후소득 대비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치적 선호를 고려한 정치공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 및 대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입니다.</p> <p>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추후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제전반에 가져올 부정적 시나리오 한 가지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출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비 등 복지관련 정부지출의 증가와 국민연금의 수지구조 악화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특히 혁신기술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측면에서 혁신산업의 발전이 저하되는 동시에, 혁신상품의 수요 측면에서도 첨단제품에 대한 고령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기에 첨단산업의 수축 또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p> <p>우리의 경제가 첨단산업의 수출을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영향은 그리 우호적이 않은 듯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생각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대응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민생 분야 토론 의제 #1**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경제>**

<b>토론 의도</b>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이 한국사회에 미칠 주요한 영향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취해야할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Fed)은 2015년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여 왔으며 지난 15일에도 기준금리를 연 0.50-0.75%에서 0.75-1.00%로 인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따른 ‘초저금리 종언’ 시대가 한국사회에 가져올 중요한 파급효과들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민생 분야 토론 의제 #2**  
**<가계부채의 증가>**

<b>토론 의도</b>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를 바라보는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b>토론 질문</b>	<p>Q)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해 11.7%의 부채증가율은 2010-2014년 평균 6.9%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민생 분야 토론 의제 #3**  
**<조세정책>**

<b>토론 의도</b>	노령화, 저소득층 지원, 실업 지원금 등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에서 어떠한 조세 정책으로 복지 수요와 재정 적자 간의 간극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검증 필요
<b>토론 질문</b>	<p>Q) 최근 각 후보들은 조세 정책을 놓고 첨예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기존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차기 정부에서 증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증세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p>

<b>민생 분야 토론 의제 #4</b> <b>&lt;소득 불평등과 양극화&gt;</b>	
<b>토론 의도</b>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검증
<b>토론 질문</b>	<p>Q)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그 정도와 불평등 심화 비율의 증가 속도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p> <p>소득 양극화의 대표적인 측정지표인 소득집중도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정도와 증가 속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 (『Sharing the Growth Dividend : Analysis of Inequality ni Asia』, IMF Working Paper, 2016.3)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의 29%에 비해 2012년에는 45%로 약 16%p 증가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집중도 상승률은 53.8%로써 가장 빠르게 집중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2016)는 이를 근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부분 상위 10%의 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p> <p>(1)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렇다면 후보께서는 소득불평등 문제의 해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b>민생 분야 토론 의제 #5</b> <b>&lt;국민연금 운용방안&gt;</b>	
<b>토론 의도</b>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삼성물산과 체일모직의 합병 사례와 같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경제적 개입에 관한 스캔들, 더불어 국민연금의 수령액 및 적립금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연금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p> <p>(1)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후보들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상태가 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공사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후보자들께서 제시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p>

<b>복지-여성 토론 의제 #1</b> <b>&lt;핵심복지정책과 재원마련방안&gt;</b>	
<b>토론 의도</b>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핵심복지정책 및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 검증
<b>토론 질문</b>	Q)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연적이고,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를 위해 가장 핵심이라 생각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이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 정책을 추진 및 유지함에 있어서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b>복지-여성 토론 의제 #2</b> <b>&lt;저출산·고령화 문제&gt;</b>	
<b>토론 의도</b>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져오는 사회문제 및 그 심각성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서의 정책 공약 평가
<b>토론 질문</b>	Q)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와 연관되는 문제로,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의 노령화 진행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복지-여성 토론 의제 #3</b> <b>&lt;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gt;</b>	
<b>토론 의도</b>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한 후보의 문제의식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
<b>토론 질문</b>	Q)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일-가정 양립은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 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지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일과 육아, 가사노동을 모두 책임지는 슈퍼맘이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데,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데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지난 해(2016년) 국내 출생아 수는 40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복지-여성 토론 의제 #4</b> <b>&lt;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gt;</b>	
<b>토론 의도</b>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대하고 있지만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의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 후보자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 및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
<b>토론 질문</b>	<p>Q)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 불평등 해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p> <p>이미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의회와 내각,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고위직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원 등 공직의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p> <p>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공공부문 고위직 진출을 제고하기 위해 후보자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b>교육-과학-환경 토론 의제 #1</b> <b>&lt; 장기적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 &gt;</b>	
<b>토론 의도</b>	정권 교체와 함께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 온 지금까지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
<b>토론 질문</b>	<p>Q) 예부터 십 년 계획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고, 백 년 계획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포되는 교육정책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보다 불안감을, 학교 현장에서는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의례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p> <p>교육정책은 현장에 파급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그 어느 정책들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들의 교육정책들을 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의 교육정책은 재고의 여지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어떤 정책은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도 못한 채 다른 정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p> <p>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들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포되는 교육정책들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교육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교육현장의 진정한 변화로 연결되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p>

<b>교육-과학-환경 토론 의제 #2</b> <b>&lt; 4차산업혁명과 교육 정책 &gt;</b>	
<b>토론 의도</b>	후보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는 지,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함
<b>토론 질문</b>	<p>Q)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지금껏 변화해온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할 것입니다.</p> <p>일례로 올해 1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6 다보스 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과 미국의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동 연구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는 대신 200만여개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고, 현재 전 세계 6세 아이들 중 약 65%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오늘날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사회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반영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들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속하게 변화하는 오늘날 한국교육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그리고 (2)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에 비추어 구상하고 계시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중요성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b>교육-과학-환경 토론 의제 #3</b> <b>&lt;과학기술 역점분야&gt;</b>	
<b>토론 의도</b>	과학기술 역점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b>토론 질문</b>	<p>Q) 후보자께서는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육성해야할 과학기술 분야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점은 계승하고 어떤 점은 개선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p>

교육-과학-환경 토론 의제 #4 <신재생에너지>	
토론 의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아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증
토론 질문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석탄과 석유의 비중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시고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육성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토론 의제 #1 <외국인 범죄문제와 사회통합>	
토론 의도	외국인 범죄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책을 어떤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범죄문제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토론 질문	Q)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토론 의제 #2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토론 의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대형재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과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토론 질문	Q)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지난 정권의 무능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재난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대형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b>사회-문화 토론 의제 #3</b> <b>&lt;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gt;</b>	
<b>토론 의도</b>	우리나라의 자살문제를 다른 근본적인 사회문제들과의 관련성 하에서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b>토론 질문</b>	Q)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살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사회-문화 토론 의제 #4</b> <b>&lt;다문화정책&gt;</b>	
<b>토론 의도</b>	국경을 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사회도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다문화정책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
<b>토론 질문</b>	Q)대량의 사람, 정보, 자본, 물자 등이 빈번하게 국경을 넘는 글로벌 시대에 특히 사람의 국간 간 이동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한국사회도 200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점차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법’을 제정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단일민족에 기초한 ‘순혈주의’ 사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사회-문화 토론 의제 #5</b> <b>&lt;한류정책&gt;</b>	
<b>토론 의도</b>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한류는 국제문화교류의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한류의 현황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인식과 앞으로의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 검증
<b>토론 질문</b>	Q) 국제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급성장한 한류는 단지 국제문화교류의 측면에서만 이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한국산업의 성장동력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류는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 미국,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류 확산에 대한 견제로 반한류, 혐한류, 항한류, 역한류 등 상대국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주춤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후보들께서는 한류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한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 분야별 토론의제

## IV. 분야별 토론회

### 1. 정치 분야 토론회

정치 분야 주제	주제별 의제
I. 대통령 리더십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정신과 국가비전</li> <li>■ 대통령 인성 및 자질 검증</li> <li>■ 인사정책 및 측근관리</li> <li>■ 적폐청산과 사회통합</li> <li>■ 대통령과 재난대처</li> </ul>
II. 정치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li> <li>■ 검찰 개혁</li> <li>■ 개헌의제 및 권력구조 개편</li> <li>■ 지방자치와 지역발전</li> <li>■ 대통령과 연합 정치</li> </ul>
III. 국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과 국회 관계</li> <li>■ 대통령과 정당 민주화</li> <li>■ 대통령과 언론관계</li> <li>■ 대통령과 공약</li> <li>■ 정치소통과 국민 참여</li> </ul>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 <시대정신과 국가비전>	
<b>토론 의도</b>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통령이 추구할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십에 대한 검증
<b>토론 질문</b>	<p>Q)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 위기 가운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만큼 새로운 대통령이 주도해 가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후보들의 리더십 비전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p> <p>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안과 밖으로 여러 중대한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며, 대통령으로서 이를 구현할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대통령제 운영의 묘미는 1인에게로의 권력 집중이라는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지도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 비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세간의 부정적 인식은 주로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전횡과 측근비리, 과도한 사정권한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 역사를 돌아볼 때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해방을 달성한 링컨 대통령,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위기를 국민단합을 통해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등 위대한 대통령들이 없지 않았다. 우리의 경우도 과거 대통령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북방정책을 펼친 노태우 대통령,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 IMF 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김대중 대통령, 지역감정을 극복한 노무현 대통령, 해외 수주 사업을 다수 성공시킨 이명박 대통령 등을 상기해 볼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내질서의 와중에 대통령 선거때마다 시대정신에 대한 정의와 토의가 이어졌다. 세계화의 문제, 남북화해의 문제, 생산과 복지의 문제, 동북아 외교 문제 등 굵직굵직한 대형 어젠다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정치권과 후보들은 이에 대한 각기 다른 해답과 처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미국과 중국이 G-2시대에 갈등을 겪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의 담론 속에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가이익 실현을 위해 자국 중심주의로 변하고 있는 이 때,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지금은 현직 대통령 탄핵 및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서둘러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이다. 한 대통령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차분히 다음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고려해 볼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검증과 비교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디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만능 전문 지식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 관련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관건이다. 지도자의 미래 비전 리더십이야말로 대통령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기 때문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는 무엇인가?

매일경제 홍기영 주간국장의 주장에 따르면(매일경제 2017.03.20.) “한국은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에서 10년 넘게 정체 상태다. 잠재성장률은 뒷걸음질 치면서 2%대로 추락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얼어붙어 민간과 정부 부문의 불균형이 심화한다. 2016년 성장률 2.7% 가운데 2.2%가 정부지출과 건설 투자에 의존한 것으로 분석될 정도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수출주도형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 경제는 중환자 상태다. 획기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인 성장률이 3%대 재진입하길 기대하기 힘들다.

국론 분열,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통합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나? 권력의 오남용과 오작동을 막을 적폐청산과 통치체제의 개편 방향은? 성장 엔진을 무엇으로 활성화해 경제를 살려낼까? 정책의 단절 대신 정책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령화·저출산 추세에 최선의 복지체제 구축 방안은 무엇인가?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외교 안보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나? 차기 대통령은 이 같은 핵심 이슈에 정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중구난방식 모순된 공약보단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국정과제 추진방안 제시가 절실하다.”



## 2) 왜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들은 이전보다 더 큰 상실감에 빠져들지 모른다. 또한 구체적 로드맵이 결여된 비전은 애당초 제대로 된 비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으로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실천 가능한 미래 대한민국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특정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자산(political capital)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연합(political coalition)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공약의 산발적 집합체는 긴 목록(laundry list) 나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후보, 이를 실현해 낼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구상을 갖추고 있는 후보를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후보 본인의 시대정신 인식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 ▶ 시대적 요구 이해에 대해 후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무엇인가?
- ▶ 트럼프와 푸틴, 시진핑 등 소위 강자들(strong man)이 주요 국가의 리더십 위치에 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 본인의 해석은 무엇이며 대한민국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 ▶ 남북관계를 둘러싼 시대적 요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2 <대통령 인성 및 자질 검증>	
<b>토론 의도</b>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로서의 경쟁력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홍보 능력 검증
<b>토론 질문</b>	<p>Q)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통령제도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대통령제 시스템이라고는 해도 대통령 한 명의 성격과 태도, 스타일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p> <p>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함께 토론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을 간단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제임스 바버(James David Barber)는 1969년 대통령의 성격(Presidential Character)라는 제목의 책에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몰락을 예고한 바 있다. 예측의 근거는 닉슨의 성격이 적극적-부정적(active-negative) 조합이라는 것이었고, 결국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1974년 하야하기에 이른다. 이후 바버의 대통령 성격과 업적 상관관계 연구는 큰 각광을 받으며 지금도 미국의 정치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필독서로 읽히고 있다. 바버는 대통령의 성격을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적극적-소극적, 일을 즐겨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으로 나눈 후 4가지 조합을 만들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성격을 비교한다. 바버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개인적 성격은 주로 가치관(world view)에 직결되는데, 이 가치관이 결국 대통령의 업적(performance)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성격은 물론 적극적-긍정적이지만, 위대한 대통령이 늘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다. 레이건은 소극적-긍정적(passive-positive)성격이었고, 워싱턴은 소극적-부정적(passive-negative)이었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다. 스코로닉(Skowronek)은 대통령 개개인에 너무 큰 비중을 “개인적 대통령제 (personal presidency)”와 루즈벨트 이전과 이후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다른 “근대적 대통령제 (modern presidency)”를 동시에 비판한다. 대통령 개인의 협상

기술이나 정치적 감각 등의 설명 범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역사의 엄연한 현실이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 이전에도 정치적으로는 흡사한 시대적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시대적 대세 (regime strength)를 지지하는 대통령인지 혹은 거스르는 대통령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판도 그 자체가 여전히 강력한지 (resilient) 혹은 약화되는 (vulnerable) 상황인지에 따라 “대통령이 만들어 내는 정치(politics presidents make)”가 다른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6명의 대통령을 겪어 본 한국의 경우 6명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각기 다른 성장 배경과 정치적 경험을 소유한 대통령들이기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인간적 특징(personality)이 고스란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묻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성이라는 것이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고 유동적인 성격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각기 다른 대통령들이 각기 다른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였다는 점만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인성과 성격의 대통령이 2017년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것일까?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개인 000의 인간적 장-단점, 그리고 대통령 후보 000의 장-단점은?

우리가 겪어 온 한국의 대통령들은 주로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이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유의 정치적 개성 (political personality)은 YS와 DJ 양김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군 생활 중 알려진 개성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에 크게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입지전적인 배경을 가진 인물들 특유의 추진력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연관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미혼 여성으로서 가지는 개성이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있다. 물론 대통령의 인성과 스타일이 자질과 능력에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어릴 적 경험이나 사회화 과정에서의 체험, 이후 삶의 궤적들이 현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때 대통령도 예외이기는 어렵다. 후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 장점과 단점,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진솔한 진단을 들어본다면 어느 정도 이후 당선될 경우 보여줄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어떤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는가?

현정사를 돌이켜 볼 때 임기를 마치고 존경받으며 퇴임 후의 삶을 살았거나 살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들이 많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을 지켜 본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이제는 퇴임 후 사회 신망을 잃지 않고 국가 원로로 남아 있을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를 위해서는 퇴임 후 자신의 모습을 임기 중에 성실히 상상해 보는 대통령의 자질이 필수적이라 보여 진다. 또한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국민들 기억 속에 남겨지기를 바라는지의 문제는 임기 동안 어떤 대통령으로 국정을 수행할 것인지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퇴임 후 자신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게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함께 토론하고 있는 다른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 간략히 평가한다면?
- ▶ 정치에 처음 입문하게 되었을 때 가장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아 본다면 누구인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3 <인사 정책 및 측근 관리>	
토론 의도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부 인사 권한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 의식과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철학과 정책, 그리고 측근 관리 방안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Q)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 권한이 큰 만큼 이를 제대로 잘 사용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 정권 초기 특정 배경을 가진 집단 혹은 비리에 노출되어 있던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고 이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쉽게 상실해 버린 적이 많습니다. “고소영” “성시경” 등 대통령의 인사실패에 대한 풍자적 비판이 시중에 넘쳐 날 때 대통령의 리더십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많은 측근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악순환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19대 대선의 경우 당선 직후 곧바로 인선을 완료하여야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어떠한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측근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핵심 국정요소이다. 능력 위주, 지역 안배 등 인사에 관련된 여러 지침이 있지만 어떤 한 가지 요소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제의 경우 보통 장관에 임명하면 4년 동안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신중하게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철저하게 의회의 검증 및 승인을 통과하였기에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장관의 평균 수명은 기껏해야 1-2년인데, 이마저도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크게 흠집이 난 이후의 일이다. 대통령 한 명이 국정의 모든 것을 챙길 수도 없고 챙겨서도 안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주변에 어떤 인사들이 보좌하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느냐의 문제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없다.

또한 최근의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측근들과 비선집단들은 특이한 성격을 가진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의 말을 들어보자(조선일보 2017.03.18.) “한국 정치에서 '충성(忠誠)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란 충성 집단을 거느린 대통령이 두 사람 있었다. 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고 나중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진(自盡)했다. 또 다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罷免) 선고를 받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왜 충성 집단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까. 충성 집단은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과 같다. 웬만큼 나쁜 정치를 해도 지지를 쉽게 거둬들이지 않는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대통령이 비틀거리도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의 시간을 벌어준다. 충성 집단이 약(藥)이 되는 상황이다. 반대로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충성 집단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됐을 때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사람들 이마에 '배신'과 '반역'의 도장을 찍어 봉쇄한다... 대통령이 충성 집단에 기대는 정도가 클수록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여러 대통령이 반대 집단을 관리하는데 실패해서가 아니라 충성 집단의 독성(毒性)을 가볍게 다루다 뜻밖의 종말(終末)을 맞았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대통령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어떤 성격의 내각을 꾸릴 것이며, 인사 정책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 선거인 관계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정권 인수 기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7년 5월 9일 투표가 시작되고 당선 이 결정되어 선포되면 그 순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어 총리 이하 각부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와 여러 국가 기관의 수장을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 어찌 보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정책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선거 과정에서 검증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 토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행정부 구성원들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 국민에 대해 알리고 국민들이 이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선 기준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와 같이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더라도 능력만 검증되면 지명을 강행할 것인가? 지역 안배와 능력 우선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인가? 외교안보 장관과 경제관련 장관의 경우 특히 어떤 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 2)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측근의 역할은 무엇이며, 측근 관리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혼자 정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대통령제 민주주의다. 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인해 “측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 또한 사실이다. 측근의 도움으로 인해 유발된 대통령 정치의 긍정적 효과에 비해 독단적 인사와 소통 지체 등 부정적 영향을 훨씬 더 자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 후보들에게 측근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질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측근 관리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막연하고 교과서적인 답변에만 급급해 왔다. 제대로 된 검증은 하자면 후보들 본인들이 생각하는 측근의 정의와 범위, 기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측근 정치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측근 정치 간의 괴리가 이전 정권에서는 늘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책임 총리 및 책임 장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총리에게 맡길 것이며, 장관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대통령-총리-장관 간의 행정부 내 권한 및 역할 분업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 생각은 무엇인가?
- ▶ 장관 임명자들에 대한 능력 검증 못지않게 도덕성 테스트 또한 국민적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인선 과정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현재 대통령 후보로서 향후 국정 운영을 책임질 인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가?
- ▶ 선거 과정에서의 캠프 참여자들은 후보의 측근들인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아니라면 왜 아닌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4 <적폐청산과 사회통합>	
<b>토론 의도</b>	<p>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대선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검증</p>
<b>토론 질문</b>	<p>Q)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촛불, 흙수저와 금수저 등으로 대변되는 이념, 성, 계층, 지역간 갈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진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을 요구하는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과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국민통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대통령은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던진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자,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갈등은 이처럼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 역할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탄핵 정국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이념별, 계층별, 성별, 세대별, 지역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은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던지 간에 이러한 갈등은 대통령으로서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후보 검증의 단계에서 후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존하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으로서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과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과 통합을 요구하는 갈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평가와 극복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비교

정확한 진단은 처방에 우선한다. 따라서 후보들이 한국 사회의 현존하는 갈등의 양상과 정도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priority)와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실 한국사회의 갈등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간 갈등 또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간 갈등 또한 심각하다. 채용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성별 간 갈등 또한 심각한 수준이며,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세대간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은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서 ‘태극기와 촛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간극이 심화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하나의 정답(正答)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겠지만, 후보자들이 이처럼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인과관계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는 이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후보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비교·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특히 국민통합의 방안과 관련해서 단순히 필요성을 인식한 선거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사회적·교육적 등) 노력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적폐청산과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 비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과오(過誤)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선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런 책임 공방은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모순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 즉 과거 정부의 실정과 관련한 책임자를 철저히 추궁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과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가려 낼 의지가 있는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赦免權)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본인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 근거와 함께 답을 해주십시오.
-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과거 정부의 잘못과 책임은 어느 정도나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치 분야 토론 의제 #5 <대통령과 재난 대처>	
토론 의도	과거와 달리 한국은 대형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재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토론 질문	<p>Q)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대규모 자연재난 및 인적·사회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재난의 경우 그 성격이 복합적이고, 대형화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인근 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지방정부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p> <p>그런데도 정부가 세월호나 메르스, 구제역 등의 재난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국민의 원성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재난 대응 조직과 예산을 어떻게 설정할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현대의 재난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막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 인간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가령, 재난 관련 예산 부족, 재난 관리 기관의 낮은 위상, 기술과 장비의 미비,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책임 전가, 폐쇄적 관료주의, 신속한 대응을 막는 복잡한 결정 절차,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실패 등이 특정한 재해나 참사와 겹쳤을 때, 재난 관리는 실패할 뿐 아니라 피해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바로 2005년 카트리나 대처에 실패한 미국 정부가 대규모 청문회와 정부 공식 보고서(“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를 통해 인정한 실패요인들이다. 미국은 이후 2006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에는 더 나아가 ‘총체적 지역사회’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 접근법은 지역주민, 재난관리전문

가, 관련기관과 지역사회대표자, 정부 공무원들이 각 지역 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여, 지역사회의 자산과 역량 및 이해관계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동안 재난 관리에 얼마나 노력했고,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재난 중 떠오르는 것만 나열해도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2년 태풍 루사와 사스(SARS),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07년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유출, 2014년 세월호 침몰, 2015년 메르스와 경주 지진 등 그 규모와 피해액은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또한 이와 더불어 거의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 원전지역 방사능 유출, 국가산업단지 가스 누출, 상시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등의 재난 혹은 재난에 준하는 위험요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난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기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예방조치와 대비절차를 준비해놓는다면 향후에 예상치 못한 재난의 발생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일본과 한국을 휩쓴 태풍 ‘매미’의 경우, 일본에서의 풍속이 한국에서보다 2배 거셴음에도 사망자 1명과 53억 엔(약 530억 원)의 피해액만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130명 사망, 6조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이러한 차이는 사전에 재난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존재 여부, 그리고 운영 능력의 정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재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이면서, 전임 정부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중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재난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본인이 재난 대처의 최종책임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재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 1) 대통령으로서 체계적인 재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국민안전처가 있음에도 지방정부, 소방군, 피해지역 주민 등 관련 행위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한국 재난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체계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즉 1) 인적관리시스템, 2) 복구관리시스템의 측면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전자는 무질서한 인력관리체계, 불필요한 재난관리시스템,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주먹구구식 피해조사, 엉터리 복구, 복구 지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긴급재난구조부대가 편성되어 있어도 재난 발생 시 출동하지 않거나, 지역단체장이 1차적인 책임 주체임에도 재난발생 지역의 확대와 다양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의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복구가 이루어지거나, 예산부족, 인력 부족 등으로 복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부재, 정부-시민 소통 실패, 신속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자원 분배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 2)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재난 대처의 최종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민들의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재난 대처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유능한 인사를 재난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험이 없는 인사를 재난관리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난이다. 셋째, 실제 재난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에 동의한다면, 첫째, 시민들의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며, 지원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둘째, 예비 내각에 재난 전문가를 충원했는가? 셋째, 각 후보의 정책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재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재난교육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등 재난 이후 오랫동안 고통 받는 시민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재난 복구 수단으로서 특별법이 유의미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 ▶ 만약 대통령 취임 당일 해상재난 혹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6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토론 의도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보유하고 남용하여 결국 민주주의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비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서의 작은 청와대 개혁 방안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p>Q)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1인에게 인사권한, 사정권한, 예산권한 등이 집중되어 있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작은 청와대”를 위한 후보들의 공약은 늘 제시되어 왔지만, 결국 당선 및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키우고 측근 정치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 권력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3가지 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대통령제의 본산인 미국의 경우 초대 워싱턴 대통령부터 현재 45대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소위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난받았던 경우는 닉슨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폭격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얻게 되었다. 43대 부시 대통령 또한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있어 안보와 인권을 양립불가능한 요소로 전락시킴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2명에 불과한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은 비판의 이유가 독단적 외교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전히 미국 대통령들은 의회와 여론의 견제와 협조 하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고립주의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 시스템 하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남을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전 시기는 차치하고라도,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논란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 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용으로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선보인 적은 많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 보여준 대통령 권력은 인사 권한, 사정 권한, 예산 권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을 절대 통제함으로써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토론하는 현재에도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특히 정당의 후보 공천권이 대통령 권력과 맞물림으로써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 공고화는 갈 길이 멀고, 탄핵 사태에서도 보여 지듯 권력 주변의 부정과 부패, 무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또한 실현이 불투명하다.

사실 건국 이후 독재연장이든 직선제개헌이든 줄곧 대통령의 1인 리더십에 나라가 좌지우지되어 왔던 이면에는 청와대 조직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의 견제나 시민의 공론을 비껴가며 대통령 비서실은 계속 커져갔고 국정전반에 소위 VIP의 뜻을 매개로 국정농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셈이다. 이제 탄핵 정국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바로 청와대 개혁을 이룰 적기이다. 그 중 핵심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제도의 폐지라는 의견이 있다. 우선 정무수석이 할 일은 원래 대통령이 할 일이다.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야말로 대통령 정치의 핵심인데 정무수석이라는 대리인을 세울 이유가 없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수시로 찾아가는 대통령을 우리도 이제는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민정수석 폐지는 더욱 중요하다.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종속형 검찰의 뿌리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인의 민정수석 대신 중립적 감사원과 독립된 검찰이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시스템이 되어야 제왕적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다. “작은 청와대”가 되어야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변할 것이다. 제왕이 아닌 대통령이 국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일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후보들 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언론과 여론에서 흔히 얘기되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이 실제로 제왕적인지, 제왕적이라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언론에서 자주 회자된다고 해서 모든 후보들이 실제로 문제에 공감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특히 소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이어서 모든 법안을 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제왕적 대통령은 그에 대한

생성 기원과 영역별 차이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결국 후보들 각자의 판단에 근거한 대통령 리더십 개혁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2) 제왕적 대통령 및 청와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의제들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청와대의 구조 개편 논쟁은 인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에 모두 걸쳐 있다. 청와대 비서실이 국회의 견제와 동의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손쉽게 비대해져 왔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비서실장과 정무, 민정, 외교, 경제 수석 등이 관련 부처의 장관들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기형적 상황이 연출되어 왔다. 또한 청와대 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다. 이러한 청와대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의제들은 무엇인지 검증해 봄으로써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지향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후보 본인의 정치 경험과 경력을 근거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가?
- ▶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업무 영역 및 그 한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 ▶ 청와대 개편과 관련하여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7 <검찰 개혁>	
토론 의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과 검찰의 권력 분산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검증
토론 질문	<p>Q)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권은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있었으나 제식구 감싸기 수사, 숨방망이 처벌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제어할 제도들을 시행했으나 그 효과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의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이견이 팽배합니다.</p> <p>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차기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후보들께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최근 우리 사회는 검찰의 부정부패를 몸소 실감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과 같은 뉴스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검찰 출신 인사들의 행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검찰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 5년간 금품수수 등 비리로 징계 받은 검사가 46명이나 됐지만 해임은 2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최우선의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는

다. 올해 초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5년 정치권력 그리고 재벌과 유착된 검사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 “내부자들”이 흥행한 것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은 검찰이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청렴함을 기본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원한다. 정치권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검찰의 막강한 권력 쪼개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다. 참여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시행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검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검사를 임명해야 하고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검찰청이 출범시킨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2013년 4월 폐지한 대검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2월 국회에서 표류했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공동 발의를 했으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검찰 개혁 논쟁의 중심에는 공수처가 과연 독립적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안을 발의했다. 이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 검찰비리를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즉 공수처가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검찰의 부패와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발의안은 2017년 2월 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게 되면 공수처 역시 무능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말 그대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수처 대신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확대를 통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개혁이 시

급한 이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후보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대변해왔다. 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그 동안 검찰이 기소권을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검찰개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나 그 대안이 경찰조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써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촛불집회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 역시 높다. 그 가운데 검찰의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8 <개헌 의제 및 권력구조 개편>	
<b>토론 의도</b>	국가대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개헌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의식과 개헌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검증
<b>토론 질문</b>	<p>Q) 우리 정치의 역사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패를 맞보기 일쑤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관문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합니다. 지금 정치권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p> <p>이러한 맥락에서 후보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핵심 골자는 무엇입니까? 또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구조의 어떤 부분의 개헌에 힘쓰고 싶습니까?</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권력 독점의 폐해가 초래한 결과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정치권력이 ‘비선실세’를 낳았고 비선실세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자는 권력구조의 개편, 즉 개헌의 시급함을 알렸다.

물론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7년 이후 개헌 논의는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실패를 맞보았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3당 합당 때 내각제 개헌을 합의했으나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각제 개헌 카드를 버렸다. 김대중 정부 역시 DJP(김대중, 김종필) 야권 후보단일화문에 내각제 개헌 공약을 내걸었으나 자민련 공동정부에서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게다가 우리의 개헌 논의의 역사에는 개헌 추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항상 따라다녔다. 이에 우리에게 있어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마련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1월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6%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이라도 한 듯 대선 주자들 역시 개헌에 대한 방향과 일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기에 바빴다. 현재 이들은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나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선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입장과 개헌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그 다음 단계는 개헌의 시기와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이다. 1987년 우리는 직선제를 쟁취하고도 결국 민주화 세력의 분열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러한 과오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대개혁의 첫 관문인 개헌 논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의 실리 추구가 목적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인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 시기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5월 9일 대선 투표일에 개헌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측과 개헌 시기는 대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지난 3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들과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각 당 간사들은 회동을 열고 5월 9일 차기 대선 투표일에 개헌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이후 4년 중임제를 허용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만약 대선 전에 이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다음 대통령은 최장 11년을 집권할 수 있으나 대선 후에 발의될 경우 20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헌법 128조 2항에서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개헌 발의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헌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개헌 시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개헌 논의 중 하나는 정부형태만 바꿀 것인가?(원포인트 개헌) 아니면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까지 함께 바꿀 것인가?(포괄 개헌) 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들 중에는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실현, 선거제도 개편 등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개헌의 목적이 결국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틀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원포인트 개헌뿐 만 아니라 포괄 개헌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여건상 개헌 논의 시 정부형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강한데 차기 국정을 운영할 대통령이라면 헌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형태 외에 개헌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차기 정권의 집권에 성공한다면 어느 분야의 개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가?
- ▶ 이번 대선 이후 누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을 이끌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후보자 나름의 전략이 있는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9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b>토론 의도</b>	1995년 지방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2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구유출이 겹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 도출.
<b>토론 질문</b>	Q)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는 국정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헌법 제1조에 규정했습니다. 주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분권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경우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은 7:3 정도로 여전히 중앙정부가 중요한 권한을 다 쥐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8:2 수준으로 재정권 역시 중앙정부의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의견상 중앙집권적인 통치 형태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국가 사무를 행정위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위임된 사무의 대다수는 기존 중복된 사무의 통폐합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기여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방자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방정부를 압도하고 있다. 가령,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는 국토 이용의 편중과 왜곡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선거 역시 중앙선거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면서 ‘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존재한다. 지역격차는 과거처럼 영·호남 간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의 구도로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지방은 하나의 완결된 정치공동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방 특수성에 맞는 행정과 주민 자치 그리고 주민들의 효능감이 저해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이고 자의적으로 권력과 돈을 쓰는 현행 통치구조는 낭비와 저조한 참여, 비민주적 행태를 초래하는 측면마저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 편차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방정치를 중앙에 종속시키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갈수록 각 지역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 주민 참여, 거버넌스(민관협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동네의 문제’에 대해 과거와 달리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참여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이 (시민)정치의 중요한 공간이자 그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 내각은 지금까지의 ‘여의도 정치·청와대 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동네안의 시민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문제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부차적인 성격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안에 비해 미뤄도 되는 과제도 아니다. 대통령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말로만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수사를 넘어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할 때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 분점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집행하는 하위행정단위에 머물러 있고, 인사·사무·재정 등의 분야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 기관으로서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의회 역시 법률적인 ‘제한’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방의 수요와 필요에 맞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사무와 재원의 불일치’ 등의 심각한 문제가 여전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권한이양에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며 자치 재정권과 자치 조직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각 후보는 1)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소극적인 집단(중앙부처 관료, 중앙의 정당정치인, 지역 국회의원 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2) 오늘날 지역발전의 의미는 무엇인가?(삶의 질,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이 일상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동네 민주주의(local democracy)'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지역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실제로 소득의 지역외유출이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의 시민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가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방향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 고민은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노인이 건강히 살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 지역발전이며 이에 기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본인이 지방자치를 실현할 책임자라고 본다면,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고, 복안은 무엇인가?
- ▶ 지방의 활력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청년인구층의 유출(서울 유입)이다.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위한 위원회를 꾸준히 운영해왔으나, 그 성과가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활성화)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0 <대통령과 연합정치>	
<b>토론 의도</b>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후보자의 정당은 국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기에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후보자의 비전과 전략의 검증
<b>토론 질문</b>	Q) 후보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시더라도, 후보님의 정당은 국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다면, 치열했던 선거전을 뒤로 하고, 다른 정당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협치(協治)는 시대적 화두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협치는 단순히 규범적인 당위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국회가 다섯 개의 정당으로 나뉘어져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의 정당은 단독으로 국회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고, 그렇기에 다른 정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미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의 과정에서 어떤 세력 혹은 정당과, 어떤 조건으로 연대를 모색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은 대통령 선거운동의 과정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정당과, 어떤 조건으로, 연대 혹은 협력을 모색할 것인지, 그리고 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경기도에서 시험하고 있는 연정(coalition government)과 같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쟁점별 협력과 같은 보다 탄력적인 성격의 것일지, 그리고 협력의 대상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연정(grand coalition)과 같은 것일지, 아니면 이념적으로 보다 협소한 성격의 연대가 될 것인지 등은 향후 등장하게 될 정부의 정책방향과 운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후보 검증의 단계에서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유권

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협치(야당과의 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 비교

역대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다면 야당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드물게 DJP 연합과 같이 당선 초기에는 선거 전의 약속대로 협력을 지속한 경우도 있지만, 이도 역시 곧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을 깨뜨려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기실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 과반수의 지지를 상시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각자의 정책적 입장을 타협하여 연정을 구성해야만 하는 내각제(혹은 의회제)와는 달리, 야당과의 협력이 정권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력구조는 아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제에서 정당(야당)과의 협력은 항상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보다 쉽게 독치(獨治)의 길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크며, 협력의 길이 막혀버린 야당은 보다 극단적인 대결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로 인해 정국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등장한 정부가 이런 반목과 갈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은 최소 3년간(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20년까지)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의 정당인 여당과 그렇지 않은 야당의 협력을 강제할 만한 마땅한 제도적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협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협치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현 20대 국회의 정당분포에 대한 이해와 연결하여 엄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협치(야당과의 협력)의 대상, 조건, 방법론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비교

5당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협치, 야당과의 협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우선 대상과 관련하여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대연정을 구상할 수 있으며, 보다 이념적으로 근접한 정당들과

의 소규모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조건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협력을 구하는 상대정당에게 국무총리 혹은 일부의 장관직을 양보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갖는 연립정부를 구상할 수도 있으며, 사안별·쟁점별로 협력의 대상과 조건을 달리하는 보다 탄력적인 성격의 연합정치를 모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안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 정당의 협조를 구하고, 경제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정당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

그러나 이러한 협력의 대상, 조건, 방법론의 다양한 조합은 향후 등장하게 될 정부의 정책방향과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협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역대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력을 구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야당 및 국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십니까?
- ▶ 현재의 국회는 5당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특히 어떤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모색하시겠습니까?
- ▶ 국회 및 야당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1 <대통령과 국회 관계>	
토론 의도	대통령의 국회 관련 인식 및 전략에 대한 검증을 통해 향후 대통령과 국회 관계를 예상해 봄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의제가 어느 정도 입법화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기회
토론 질문	<p>Q)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Legislator-in-chief”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화 시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국회의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개혁 법안이 만들어집니다.</p> <p>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전략은 무엇인지, 국회의와의 협력을 통한 국정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대통령으로 칭송받고 있다. 물론 그의 대중 연설 솜씨나 흑인 교회에서 선창하는 정치적 순발력은 높이 살만 하다. 하지만 2013년 미국 상원이 총기 규제 개혁 법안 통과에 실패했을 때 평상시 오바마를 지지했던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조차 오바마의 소극적인 의회 로비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대중에게는 친숙하고 인기있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지만, 실제로 총기 규제 개혁 법안을 상원에서 밀어붙일 때에는 주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일에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인해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은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런데 1965년 당선된 뒤 곧바로 베트남에 미국 군대를 증파하여 베트남전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1968년 1월 베트남들의 대대적인 습격에 미국 군인들이 많은 사상자를 잃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 미국 국민들은 베트남전에 별 문제 없었던 존슨 대통령의 신뢰도에 큰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전쟁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베트남전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 존슨 대통령은 결국 1968

년 재선에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존슨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자신의 의제를 통과시킴에 있어 의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본인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였던 경험을 살려 주요 법안 논의 때마다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에 능했던 것이다.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고 불리는 미국의 복지시스템 근간은 바로 존슨 대통령의 대(對)의회 설득작업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국민과의 소통에 능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국회와 협력해 일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일까? 중요한 점은 민주화 시대 특히 국회법 개정으로 5분의 3이 동의해야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현재의 국회와 잘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더구나 양대 정당 시스템이 아니라 3당에서 5당 체제까지도 가능한 국회 구도를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의 대(對) 국회 전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회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회는 교섭단체라는 특이한 원내 교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먼저 법안 관련 협상을 벌이고 이를 각자의 정당 의원총회에 돌아가서 보고한 후 추인되면 최종 법안 통과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상대적으로 의원 자율성이 크게 낮는데, 위로부터의 공천 제도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결국 정당 기율이 강하고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매우 큰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대통령이 국회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를 국정 운영의 선순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때로는 협력, 때로는 경쟁의 구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국회 우회 전략을 주로 택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 2) 자신의 국정 기초 혹은 정책 내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현재 미국 정치는 정당 양극화(party polarization)로 인해 국정이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대화도 잘 하지 않는 지경이라 법안을 놓고 초당파적 지지(bipartisanship)를 꿈꾸는 일은 상상

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국 국회도 이와 매우 닮아 있다. 그나마 후보 선출 권한이 유권자들에게 있는 미국에 비해 공천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 독립성이 훨씬 더 약하고 정당간 경쟁이 더욱 심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들어선 이후 다소 약화된 정당 양극화는 여전히 보수/진보 갈등 앞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정당 양극화의 핵심에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눈에 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입장을 취하는 순간 정당간 극단적인 입장 선택을 부추기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상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자신의 편으로 돌려 세울지 복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개혁 의지도 일순간 정당간 경쟁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처럼 직접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전략 혹은 지역구민을 동원한 압박 전술 등 대통령이 고려하여 실천하는 국회 전략이야말로 대통령 임기 동안 성공적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정치인으로서 또한 대통령 후보로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실질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구도 및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 ▶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로 특정 정당의 지도자로서 특정 의제를 추진할 때 정당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한 정당의 지도자(party leader)로서의 대통령 위상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나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2 <대통령과 정당 민주화>	
<b>토론 의도</b>	여전히 후보선출 과정 등에 있어 정당의 당내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정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검증
<b>토론 질문</b>	<p>Q) 대통령은 헌법 규정대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정치 현실적으로 볼 때 특정 정당의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은 국회에서 법안 표결시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특히 선거 시기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공천 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공천 학살을 통한 정치 보복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p> <p>후보님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신의 소속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 가지겠습니까? 정당 내 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정당의 존재 없는 근대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샷슈나이더 (E.E. Schattschneider 1942)의 주장은 정당 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의 확실성 및 정당 조직의 효용성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속적인 정당 지지 성향이 응집적인 정당 조직을 통해 선거와 정책으로 연계되는 양상이 바로 근대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이다. 그런데 지지 정당 없음을 선언하는 무당파 (independents)의 규모가 커지면서 정당 일체감의 적실성은 쇠퇴하고 있는 추세이고, 조직체로서의 정당은 과거의 동원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세기 말 이래 대중 정당의 주요 기반이었던 당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산업, 계급, 지역 단위의 정치적 조직체로서의 정당이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당 시스템이 이러한 전환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선출, 선거경쟁, 정부조직, 정책홍보 등 대의 민주주의 작동과 관련된 정당 고유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정당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과는 달리, 선거를 위해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 이후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단위체로서의 정당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정치 결사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중 정당으로서의 조직체 성격이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



서, 대통령과 정당 간에는 어떤 관계의 설정이 바람직할까?

실제로 한국 정당 시스템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전략과 전술 변화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후보 선출 방식을 통한 21세기형 정당 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어 정치인들의 단기적 (short-term) 이익에 기초한 야심과 전략이 오히려 제도 확립에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때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모바일 투표, 여론조사 도입 등 새로운 예비 경선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추진한다면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실제로 제도적 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다시 말해 간판만 새로 내거는 새로운 정당 (new party)이 아닌 정당 개혁에 기초한 변화된 정당 (party transformation)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절실하다. 이를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선출되고 정당 조직의 개혁 및 유권자 연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야심과 전략에 기초한 정치세력들이 선거 승리와 정책 개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맥락에서 달성되는 정당 개혁만이 현실적이면서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신의 소속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대통령과 정당 관계만큼 그 중요성에 비해 학자들의 연구 혹은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가 없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대통령-정당 관계가 선거 전후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선거 시기에는 대통령은 정당을 필요로 하고 정당 또한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정당의 지원이 충분해야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기에 대통령에게 정당은 필수이고, 정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라는 구체적인 간판을 통해야 정당의 정책 입장을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양자간의 관계가 다소 애매해진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가의 지도자이나 정당의 지도자이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당 정치를 초월한 국가 지도자로서 국정을 수행해 가고 싶은 동기가 매우 커지게 된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자신의 소속 정당의 지지없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늘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현실이다.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바로 대통령과 정당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견해를 들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2) 정당 내 후보 선출 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후보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야말로 정당 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기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여러 가지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선출 권한을 일반 유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주목해야 한다. 이전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천심사위원회 시스템 하에서는 정당 민주화, 국회 자율성 및 전문성 고양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일반적-이론적 동의는 거의 모든 정치인이 쉽게 한다. 하지만 막상 권력을 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속 정당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칼자루를 쥔 정당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후보 선출을 둘러싼 정당 민주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오픈 프라이머리, 즉 지역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 혁신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이 대표하는 정당의 장점을 홍보하고 단점을 고백한다면 무엇인가?
- ▶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당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오래된 정치 집단으로서의 정당이 가져야 할 새로운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3 <대통령과 언론개혁>	
토론 의도	<p>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언론이 이와 같은 사태를 키워왔다면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언론개혁이 또 다른 방식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함. 이에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p>
토론 질문	<p>Q) ‘기레기’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은 그 자체로 언론에 대한 외압,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p> <p>후보들께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언론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탄핵을 주도한 입장에서는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면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사태를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을 반대한 입장 역시 현재의 사태가 모방송사의 태블릿PC ‘조작 보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주장하며 적절한 규제와 심의를 수행하지 못한 언론의 개혁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탄핵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 모두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개혁은 그 자체로 언론에 대한 외압,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종의 딜레마(dilemma)를 안고 있는 매우 민감한 쟁점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함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언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현 한국사회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비교

앞에서도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이유, 근거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현 한국사회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 언론의 문제점으로 1) 공영방송과 언론(KBS, MBC, YTN, 연합뉴스 등)의 정치권력에의 종속, 2) 사실보도, 사실확인 노력의 부재, 3) 상업주의에 포박된 포털 저널리즘 생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최영재, “언론 자유와 책임구현을 위한 언론개혁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 학술회의발표자료집, 2017년 3월 2일 참조).

1)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치권력에의 종속은 이들 공영방송과 언론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보도 과정에서부터 기계적인 균형에 빠져 제대로 된 후보검증 보도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는 대통령 권력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동정보도, 대통령 심사 살피기 보도 등으로 일관함으로써,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비리가 미리 걸리지 못하고,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언론이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이들 공영언론의 이사진 구성방식과 사장임명방식을 주목한다. 예를 들어 MBC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인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서 임명되는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과 국회 내 여당의 추천을 받은 1인, 그리고 야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의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즉, 방통위의 인적구성이 여야 3:2의 비율을 보이는 것이다.

2) 사실보도, 사실확인 노력의 부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조교육감이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 탐사보도 매체 기자의 트위터 글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조교육감도, 그리고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도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다. 몇 개의 언론이 거의 모든 뉴스의 생산을 통제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에 힘입어 무수히 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가짜 뉴스(fake news)로 나중에 판명나는 것도 적지 않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3) 가짜 뉴스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일반 시민들의 뉴스 획득 환경의 변화가 있다. 현재 매우 많은 시민들이 과거에서처럼 몇 개의 한정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된 뉴스를 모아놓은 NAVER와 같은 포털서비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 즉 포털이 중심 뉴스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이러한 포털 뉴스 공간은 상업주의에 쉽게 결박되어 사실미확인 보도, 무단 표절, 다른 기사의 제목과 표현만 살짝 바꾼 어뷰징(abusing) 기사,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마치 중요한 뉴스인 것처럼 편집되어 제시되고 있다.

## 2) 언론개혁의 방법에 후보의 입장 비교

언론 개혁은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딜레마를 안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을 만들기 위한 규제와 조치가 언론자유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 개의 언론사에 대한 조치로 언론에 대한 통제를 행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집단이 언론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사적영역에 속한다는 것 또한 언론개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언론개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과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한국 사회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언론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반발과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 ▶ 공영방송과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과 만약 이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후보들께서도 경험하셨을 수 있으셨겠지만, 이른바 가짜 뉴스(fake news)가 국민들의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4 <대통령과 공약>	
<b>토론 의도</b>	후보자 및 차기 정치 리더로서의 공약의 검증과 이행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검증
<b>토론 질문</b>	<p>Q) 차기 정부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빚은 일련의 사회적 혼란들을 재정비할 큰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볼 때 대통령은 항상 공약 이행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결과는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반복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p> <p>이러한 맥락에서 후보자들은 현재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거 공약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또한 당선 후 시민이 공약의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차기 정부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빚은 일련의 사회적 혼란들을 재정비할 큰 과제를 떠안았다. 그렇기에 대통령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국정 운영의 소신 및 방향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대통령은 항상 공약 이행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대 당시 약속했던 내각제 개헌을 당선 후 2년 뒤 철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건설)을 내놓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백지화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면서 대국민 사과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관행의 반복은 사회 내 갈등을 유발하기 쉽고 자칫 지역이기주의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행정수도 이전, 대운하사업, 영남권 신공항 이슈 등이 그랬다. 더군다나 이는 시민의 정치 불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선거 전과 후 대통령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을 비판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정책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제는 집권 이후에도 대통령의 공약을 따져보는 시민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정책으로서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정착이야말로 최소한 국정농단 사태나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중도에 파면되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된다. 지금과 같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후보자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집권 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 리더로서 공약을 정책화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선거 때마다 정치 후보자는 유권자를 유혹할 만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들은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자'식의 경우가 대다수다. 선거캠페인에서 후보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거 공약을 생산해 내는가? 후보자를 대표하는 선거 공약이 있다면, 이의 이행 가능성을 논의하는 조직 혹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성숙한 시민사회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비교 분석한 후 지지자를 결정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후보자들이 생산해내는 공약의 기준은 실천 가능성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것에 더욱 치우쳐 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표플리즘 복지사업과 개발국책사업 공약들이 이를 증명한다. 대표를 선출하는 일에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후보자의 엄밀하고 현실 타당한 공약 생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좋은 선택도 가능한 것이다. 이에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후보자는 공약을 개발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혹은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약의 실천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타진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2) 역대 대통령마다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거 공약이 있었으나 그 결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때가 많았다. 후보자는 당선 후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펼칠 계획인가? 특별히 시민이 공약의 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책임지는 대통령의 첫 행보는 후보자 때 제시한 핵심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선거 공약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연구기관, 학계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약의 이행 가능성 및 정책으로서의 적실성을 판단하고 논의한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공약 검증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한다. 즉 공약의 사후 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약 남발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 소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보자는 당선 후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대통령 당선 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가 않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가 높더라도 국정 운영의 과정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그 과정을 국민에게 알려 정책 실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보자는 국정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와 갈등의 위기에 놓일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정치 분야 토론 의제 #15 <정치소통과 국민참여>	
<b>토론 의도</b>	과거와 달리 국민은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정치인 역시 선거 시기와 재임기간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음. 소셜미디어는 소통과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b>토론 질문</b>	Q) 개방성, 확장성, 양방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새롭고, 강력한 소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합적으로 표출되는 의견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정치행보에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없던 과거와 현재의 정치소통 양상이 실제로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국민참여는 활발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소통 대안은 무엇입니까?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소셜미디어는 시민과 정치인 모두에게 새로운 의견 표출의 수단,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전략이 주효했고, 2011년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아큐파이 월 스트리트’ 운동 역시 소셜미디어에 기댄 바가 크다. 한국에서도 2010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반 시민들 역시 최근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령, 작년 하반기 광화문의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성숙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공유와 토론이었다. 또한 시민들(유권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정보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프로슈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정치참여를 진작시키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실제 소통이 활발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견 교류가 참여를 이끌

어내고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결정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의견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 때 집단 의견의 질(quality)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여론은 때로 불안정하고 모순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 무책임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대통령과 정치세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과제는 첫째, 소셜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의견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책임성을 떨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통을 했다’고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적어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명박산성”, “나홀로 인사” 등 ‘불통 이미지’를 얻은 전임 정부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큰 저항에 여러 차례 직면했던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소통’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제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각 후보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좋은 의견을 정치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대통령의 신념과 소셜미디어의 여론이 충돌할 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한 소통이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가?

소통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소통이 잘 안 됐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실제 국민들 중 정부정치인들과의 소통이 잘 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정부의 정보독점, 폐쇄주의가 여전한데, 소통창구를 늘리고 소셜미디어 담당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소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실제로 소통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소통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실제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일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이념 및 정부의 정책일관성에 반하는 소셜미디어의 의견이 충돌할 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가 유리되는 현상, 즉 의견표출과 소통은 활발하지만, 그것이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통의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통창구를 다양화하는 것과 동시에, 참여의 방식과 수준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 2) 소셜미디어 소통에서 발견되는 부정적 요소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소셜미디어는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집합적인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위험요소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가 곧바로 공개석상에서 활용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 개인의 의견을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비화할 개연성도 존재하며, 이는 국민 다수에게 박탈감과 정치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 셋째, 반대 진영의 논리를 경청하기보다는,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식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경향으로 인해,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소통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소셜미디어가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막말정치’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경감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사회분열을 부추기는 독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각 후보는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정치활동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나?
- ▶ 소셜미디어 사용이 확산되는 만큼 국가정보기관의 개입 및 감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핵심은 무엇인가?
- ▶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잘 반영하는 것에 비해 중앙정부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 중앙정부의 반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2. 외교 분야 토론회 주제

외교 분야 주제	주제별 의제
I.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li> <li>■ 대북 안보정책: 한반도 비핵화 전략</li> <li>■ 대북 경제정책: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재개 여부</li> <li>■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책</li> </ul>
II.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의 조화방안과 우선순위</li> <li>■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li> <li>■ 대북 억제력 증강을 위한 한미 협력</li> <li>■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안보협력</li> </ul>
III. 외교/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한국의 외교전략</li> <li>■ 한일 위안부합의 후속조치</li> <li>■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li> <li>■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와 China Plus One 전략</li> </ul>

<b>통일 분야 토론 의제 #1</b> <b>&lt;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gt;</b>	
<b>토론 의도</b>	<p>지난 20여 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포용정책과 강압정책을 번갈아 시행하면서 일관성을 잃었으며 정책적 효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를 의도</p>
<b>토론 질문</b>	<p>Q)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 10년간은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은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하는 대북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통일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북한의 위협 억지와 남북관계 발전, 통일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정부는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을 모두 거쳐 오면서 대북정책으로서 포용정책과 강압정책 모두를 추진해 보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 10년간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은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하는 강압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양쪽을 망라한 대북정책 20년 이후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발전, 통일과정의 진전이라는 긍정적 결과보다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증가, 남북관계 파탄, 통일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보수 그룹은 대북 포용정책이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력 증진에 도움을 주어 한국을 위협한 반

면, 실질적인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진보 그룹은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이 북한의 위협인식을 증가시키면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시켜 남북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한다. 진보 그룹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에의 꿈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수정부는 이러한 접근법이 북한에게 이용당하기만 했다고 비판한다. 보수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주장하지만, 진보정부는 한반도 주변 어느 국가도 진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주적인 대북정책과 통일 방안을 주장한다. 이처럼,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번갈아 집권해 온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북·통일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양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정책의 효율성을 잃게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는 어떠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가?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에의 꿈을 앞당기는 대북·통일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대선후보라면 이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과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가?

우선 과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인식과 평가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정부, 진보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찬반 여부를 넘어서서, 비판적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 정당의 비판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북한에게 이용당하기만 했다는 보수그룹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북강압정책이 남북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진보그룹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과거 정부들이 선택했던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중심의 접근법과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동맹중심의 접근법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들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지 못하여 혼란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았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대북·통일

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의 변화인가? 남북관계 발전인가? 혹은 한반도 통일인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은 무엇인가? 후보들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동일시하고 있는가 혹은 구별하고 있는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같은가 혹은 다른가?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통일을 연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이슈들이 주요한 토론의 쟁점들이 될 수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과거 정부들은 ‘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비핵개방3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의 용어로 대북정책을 제시해 왔는데,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 ▶ 미중관계의 변화 및 미국과 중국의 차별된 대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각 후보들은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혹은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b>통일 분야 토론 의제 #2</b> <b>&lt;대북 안보정책: 한반도 비핵화 전략&gt;</b>	
<b>토론 의도</b>	<p>북핵문제가 1990년대 초반 불거진 후 4반세기가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각 후보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현재 북한의 핵 능력과 주변 국가들의 북핵 정책을 고려할 때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의도</p>
<b>토론 질문</b>	<p>Q)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4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지난 2006년 이후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강화하면서 핵 보유와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현재 북한의 핵 능력과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추진해야 합니까?</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1990년대 초반 북핵문제가 불거진 후 4반세기가 지났지만, 북핵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속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아래 표 참조).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의 2.13합의/10.3 합의, 2012년의 2.29 합의 등 수 차례의 합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10년 가까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자협상이든 다자협상이든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제재를 통한 비핵화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북한이 5번의 핵실험을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매년 제재 결의안(UNSCR)을 부과했지만,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 사이에 대북제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북핵 정책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북한은 ‘핵무력경제병진노선’을 내세우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천명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왔다.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관련 주변국들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향후 한국 정부는 어떤 북한 비핵화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 핵실험을 억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대북 제재 전략은 무엇인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서 논의되었으며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가?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는가? 반면,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딜레마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표 1> 북한 핵실험 비교**

	1차	2차	3차	4차	5차
시기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위력(Yield)	0.8kt	2~6kt	6~7kt	6kt	10kt
지진파 규모	3.9	4.5	4.9~5.1	4.9~5.2	5.0~5.3
형태	플로토늄	플루토늄	플루토늄? (핵분열)	증폭핵분열단(핵융합?)	핵탄두 실험?
핵능력 추정	1. 북한은 현재 핵무기 10여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50여kg 이상의 플루토늄 핵물질 및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현재도 핵 활동을 지속하며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음. 2. 북한은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스커드나 노동, 북극성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추정도 있음.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과거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가?

우선 후보들이 한국정부의 기존 북한 비핵화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비핵화 전략은 ‘기능주의(functionalism)’ 접근법으로 경제와 사회 부문의 남북한 협력을 통해 정치, 군사

부문에서의 협력도 유도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는 ‘확산효과(spill-over)’를 추구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전략이 실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며,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우선한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이 연속적인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핵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이 전략 역시 비핵화에 실패했다. 후보들은 기존의 비핵화 전략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각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비핵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 2)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북한 비핵화 전략에서 6자회담 참여국들에 대한 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에 따른 해결에 의존하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자 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실현하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제재 위주의 정책을 취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강력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추진을 주장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중 협력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들은 한국이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북한과 중국은 평화협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강력한 북핵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제제재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각 후보들은 북한 비핵화 정책과 대북정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b>통일 분야 토론 의제 #3</b> <b>&lt;대북 경제정책: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재개 여부&gt;</b>	
<b>토론 의도</b>	<p>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인데, 각 후보들은 남북 경협 효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향후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 제시를 의도</p>
<b>토론 질문</b>	<p>Q)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남북경협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함께 경협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p> <p>후보들께서는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협 재개가 필요하다면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언제쯤 재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남북 경협 재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포함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살된 이후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지난 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폐쇄되었다. 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남북 경협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일종의 경제제재 주장이다. 반면, 남북 경협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어렵게 되었고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낮아졌으며 대중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비판도 강하다 (아래 자료 참조). 경협중단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표 2> 북한의 대 중국 무역 현황 (단위: 백만불)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754	1,887	1,187	2,464	2,485	2,914	2,841	2,484
수입	2,033	793	2,277	3,165	3,528	3,633	4,023	3,226
합계	2,787	2,680	3,465	5,629	6,013	6,547	6,864	5,710

자료: 국가통계포털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다음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 재개 여부의 찬반을 넘어서서 각각의 경우 어떤 과정과 문제점이 있는지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경우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고 북한의 행동 변화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경협 상대방인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경협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 한국의 경제적 선의에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만 보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 제재를 비롯한 대북 경제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경협 재개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대북 국제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남북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남북경협을 재개하지 않고 제재를 지속하는 경우 북한의 경제 침체를 가중시켜 북한 자체의 개혁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제제재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사실상 남북관계를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전체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구나 남북경협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 내부의 시장화 및 정보화와 함께 북한의 자생적인 변화를 촉진시켜 김정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구조 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재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후보자들은 남북경협 재개 문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해 각 후보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질문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질문은 향후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한다면 협상 상대인 북한에 대해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재개에 반대한다면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전무한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2) 남북경협 재개에 관한 상대 후보의 주장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남북경협 재개에 관한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넘어 경협 재개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후보의 비판에 대한 재반박 및 설득 작업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 재개에 반대하는 후보에게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낮다는 점과 남북관계 전반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안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남북경협에 찬성하는 후보에게는 한국의 경제적 선의가 북한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남북경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남북경협의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가, 분리되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 ▶ 남북 경협 이외에 북한의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 남북관계에서 경제와 정치군사는 연계되어야 하는가, 분리되어야 하는가?

**통일 분야 토론 의제 #4**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책>**

<b>토론 의도</b>	<p>북한 문제는 남북한관계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각국과 맺는 정치, 군사, 경제를 망라한 외교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북핵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및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노력이 시급한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해결방안을 묻는 의도</p>
<b>토론 질문</b>	<p>Q)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 정부들은 물론 인권단체들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범죄로 정의했습니다.</p> <p>국내에서도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과거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북한정권의 정치권 시민권 탄압에 대한 강한 비난과 압박을 강조하는 입장과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권, 사회권의 증진을 도모하자는 입장이 대립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데 국내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지원과 지지를 얻으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해야 할지, 특별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지, 또한 북한정권이 핵도발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한반도 안보, 평화, 인권에 도움이 되도록 할지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민족)이 정치적 탄압과 경제, 사회적 곤궁 상태에 처해 있다는 국내 문제 혹은 남북한 간의 민족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국제사회의 개입 및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주민과 정권의 관계를 넘어서 온 인류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반인도범죄로 규정되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제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남북한관계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으로 북

한 인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는 지난 20년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압박과 지원, 시민·정치권과 경제·사회권이라는 양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인가, 국제사회가 해결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후보들이 우리 정부의 최고결정자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북한 인권 및 인권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사회의 이념적 분열을 통합적인 사고로 봉합하며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나아갈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첫 번째 쟁점(논점)은 북한의 시민·정치권과 경제·사회권 증진 문제를 후보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보고 있는가, 지난 십년, 길게는 이십년 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분열시켰던 양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후보들이 단지 양시론이나 양비론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구비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과 국내 이념적 갈등의 해소를 이루어 내려 하는가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과 그래프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정치범수용소의 수용인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한 추산치와 영유아 사망률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산치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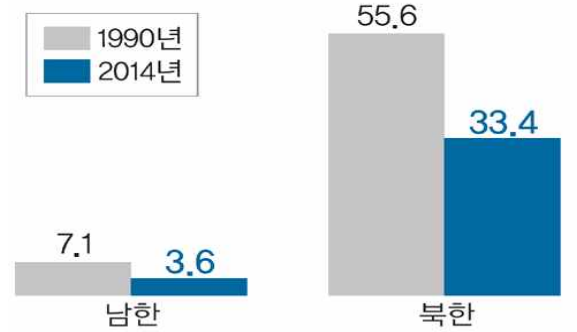


\*동아일보(2009.10.17.)



### 아동 사망률 현황 (단위: 명)

\*출생 1000명당 만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계일보(2016.10.31.)

두 번째 논점은 지난 이십년간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어 온 과정과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심각성 인식과 문제 해결 노력을 후보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한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사회의 흐름, 분위기,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후보들이 어떠한 고민을 해왔는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논점은 남북한관계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두 가지 문제인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관계를 후보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권 문제를 레버리지로 해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인지 후보자들의 현실인식과 해법을 들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더욱 고립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핵실험을 반복하고 미사일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에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비롯해 강한 압박을 할 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북한인권결의안 반대를 비롯해 보호막을 원하게 되고 중국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 북한에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해 후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는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증진하는 일과 국익을 추구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조화로운 일이지만 때로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냉전시절에 자유진영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재정권과 그들의 인권탄압을 묵과하여 비난을 받기

도 했고 이것이 이후의 미국 인권외교에 큰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몇년전 우리의 원유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란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되어 유엔의 이란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인권과 국익의 충돌문제가 중요한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손상시켜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일관되게 제기하고 호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면서 예를 들어 이란, 중국 등 우리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은 국가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습니다.

- ▶ 후보자들은 중국, 이란 등 우리의 핵심적인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에 인권개선요구를 하시겠습니까?
- ▶ 유엔에서 중국인권결의안이 제출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인권증진 및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안보 분야 토론회 #1 한중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의 조화방안과 우선순위	
토론 의도	<p>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경제 동반자인 동시에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가로 때때로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각 후보들이 대 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나아갈 것이며, 혹 그 중 우선순위를 택해야 할 경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지에 대한 구상 및 계획 검증</p>
토론 질문	<p>Q)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는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과 그에 따른 성장에 동반하여 빠르게 증대되어 왔으며, 2016년 현재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출입대상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그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역학에 따라 때때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 발표된 사드 한국 배치 발표 이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한국측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p> <p>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각 후보들께서는 앞으로 되풀이 될 수 있는 한중간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중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생각이신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국과 중국은 80년대 후반부터 그 전까지 막혀있던 교류를 시작해 왔으며 1992년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그에 따른 빠른 경제 성장과 맞물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국수출입액은 대미국수출입액을 넘어서

게 되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며, 한국의 대중무역 흑자액은 지난 5년 평균 약 500억불에 달한다. 양국간의 교류는 무역이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한중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으며, 북한을 사이에 두고 있고, 중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남북한 관계의 역동성에 따라, 또 한국과 미국관계의 안보 협력 여부에 따라 종종 갈등을 겪게 된다. 가장 최근 양국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의 후속 대응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여름 한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간 공동대응을 명분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외교적 경고 및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한국 측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사드의 예에서 보듯 양국간의 안보의 갈등은 경제 협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 협력의 감소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 협력의 증대는 안보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늘어난 한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되어 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 늘어난 경제 교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통령은 앞으로 되풀이 될 수 있는 한중간 안보갈등과 경제협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중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적극적으로 구상해야 하며, 특히 안보갈등과 경제협력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지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국의 경제 규모의 차이로 인해 비대칭적일 수 밖에 없는데, 상당 수준에 이른 한중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향후 한중간 안보갈등에서 한국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그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상호의존을 안보갈등을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중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늘어난

경제적 상호의존은 비대칭적인 의존관계, 즉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중국 경제의 한국 의존도 보다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간 안보갈등에서 중국 측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드 배치 결정 및 중국의 후속 보복 조치에서 나타난 안보갈등의 경제적 피해를 또다시 일방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안보갈등을 줄이는데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또 경제적 상호의존의 비대칭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안보갈등 상황에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2) 한국과 중국 간의 간헐적 안보갈등이 필연적이고, 안보와 경제교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대치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향력 행사를 가정하면, 한국과 중국의 간헐적 안보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협력이 지속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경쟁이 지속된다면, 한중간의 안보갈등의 해결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한국과 중국 사이에 남북한, 한미간 관계 이슈들과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오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인간 안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 ▶ 앞으로 되풀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b>안보 분야 토론 의제 #2</b> <b>&lt;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gt;</b>	
<b>토론 의도</b>	<p>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북핵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에, 한국의 일부 대통령 후보들은 대북 포용을 강조하는 정책 성향을 보임.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효과적인 한·미간 정책조율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검증함</p>
<b>토론 질문</b>	<p>Q) 최근 북핵정책 검토를 끝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p> <p>후보자들께서는 현 국면에서 미국과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다 포용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포용정책을 추진하신다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미국 측을 설득하고 정책을 조율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한국 외교의 난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외교적 해결이 최선의 방안으로 남아있다. 각 후보자들이 외교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해결에 필수적인 미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의 제재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해 더욱 강한 국제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일부 대통령 후보들은 대북 포용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선호한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격과 미국의 위기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적 차이는 잘못 관리될 경우

대단히 심각한 한·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정책방향을 선호할 경우 미국과의 정책적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대북 제재를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강화해야 하는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제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동의한다면 어떤 수준에서 어떤 구체적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세컨더리 보이콧조차 북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회의론이 존재한다.

### 2) 대북 협상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북한이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협상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서 포용이 이루어질 경우, 최종 협상을 위해 사용할 포괄적 협상안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포용과 협상을 어느 정도 속도와 어떤 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경제협력과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 3) 미국과의 정책적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한·미간에 북핵정책에 대한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책적 차이가 심각할 경우 이를 제어하고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 만약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어려워진다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한 조치들  
이나 군사조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가?
- ▶ 미국이 중국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해야 하는가?



<b>안보 분야 토론 의제 #3</b> <b>&lt;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협력&gt;</b>	
<b>토론 의도</b>	5차례 핵실험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의 진전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현실화함. 자체 억제력 강화와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검증함.
<b>토론 질문</b>	Q) 북한은 이제 한국에 실질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간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대북 억제력 강화는 한국 안보의 긴급한 과제이다. 북한지도부의 강한 핵 능력 고도화 의지를 고려할 때, 비핵화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북 억제력 강화에 강력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근접해 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안보 딜레마를 증대시켜 군사적 위기가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일 것이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능력에 대한 억제는 효과적인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기술·정보 협력 뿐 아니라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영성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차기 대통령은 이념과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사활이 걸린 대북 억제력 강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 토론에서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미국의 사드 배치가 필요한가?

사드의 미사일방어 능력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일부 논자들은 한반도의 짧은 중심으로 인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 자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드가 대단히 높은 요격률을 가진 무기체계로 평가한다. 한편,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과 이로 인한 외교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주장과 일정한 외교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 2)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하는 경우, 분쟁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3) 핵무장을 추진할 것인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이 가장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한편, 미국의 정책의지와 동맹에 대해 전반적인 신뢰성(credibility)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신뢰할 만하고, 우리의 독자 핵무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고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한·미간 핵억제 관련 정책 조율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 ▶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의 협력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에 그대로 노출된 서울 등 대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아이언돔의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b>안보 분야 토론 의제 #4</b> <b>&lt;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안보협력&gt;</b>	
<b>토론 의도</b>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기인한 2016년 11월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유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검증
<b>토론 질문</b>	<p>Q)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과정에서 국내 여론 수렴 미흡으로 인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 자위대의 개입 여부에 대한 국내의 불신감이 큰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p> <p>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일안보협력의 필요성 차원에서 한일안보협력을 수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후보들께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밝혀주시고, 한일안보협력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냉전시기 구축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군사작전에 주일미군과 주일미군기지가 사용된다는 전제 속에서 미국은 미군의 군사작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한일 양국 간의 안보협력의 발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대하여왔다. 하지만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역사로 인한 특수관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한국 내에서 수용되지 못해왔다.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중국의 부상 이후에 더욱 강화되어왔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정책'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의 진전을 요구하는 맥락으로 기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한일안보협력의 첫걸음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였다. 일본정부와의 협의 후,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후 2012년 6월 29일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대

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대신의 서명으로 체결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비공개에 추진되던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강한 비판과 반발이 일어났고, 이명박 정부는 협정 체결 한 시간 전에 체결 보류를 결정하였다.

박근혜 정부 집권 하인 2014년에는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어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의 군사정보가 한일 군 당국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은 범위의 제한성, 미국경유의 비효율성, 법적 구속력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의 요구는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주장하는 측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증대 속에서 일본의 정보 능력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는 측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일본의 정보력은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한국 측이 유의미하게 얻어낼 이점이 없으며, 추가적 안보협력(한일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 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논단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2016년 10월에 협의 재개가 발표되고 11월에 협정 체결이 이루어진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적 반발은 강했지만, 탄핵 국면과 사드 배치 문제에 묻히면서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 배치 문제와 결부되어 한국의 안보적 위치를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고할 의사가 있는가? 그럴 경우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외형상 한일 양국 정부의 자발적 선택이지만, 근간에 미국의 군사적 전략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관계만의 이슈가 아닌 한미관계의 이슈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반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과거의 선택을 할 경우에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미관계에의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야 한다.

2)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수용한다면, 이에 대한 국내적 반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적 동의가 높을지라도, 그 부분으로서의 한일안보협력에 대해서는 국내적 반감이 매우 크다. 국내적으로 거부감이 큰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할 경우에 이 문제가 일본과의 역사현안을 둘러싼 갈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등에 대한 의구심 등과 얽혀서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국내적 반감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만약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공식적으로 갖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한 국내적 의구심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있는가?

외교/통상 분야 토론 의제 #1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한국의 외교전략>	
<b>토론 의도</b>	한국은 그동안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했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 양 강대국간 이견이 증폭되면서 한국 외교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의도
<b>토론 질문</b>	Q)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기본적 대외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외적 팽창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적극적 대응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안보이슈에서는 미국과 함께 한다는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북핵, THAAD, 자유무역 등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들께서는 미중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략과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기본적 대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외교적 동맹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튼튼한 안보의 초석이였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주변국인 한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회를 가져 주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동북아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외교는 상당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의 대외적 팽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다른 동아시아 동맹국인 일본만큼 중국 견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한중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안보이슈에서는 미국과 함께 한다고 비판하며, 한국을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에서 분리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과거의 조공 외교를 강요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제규범에서 벗어난 중국의 패권적 대외정책 경향이나 북한 지원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외정책이 중국과 조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북핵, THAAD, 자유무역 이슈 등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으며,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을 통해 미중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우선의 정책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계획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대국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의 역할을 강화하며 도전에 대응하고 한국의 글로벌 역할과 기여를 높이려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는 미중의 패권경쟁과정에서 어떠한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가? 과거 정부의 대미 정책과 대중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외교 전략이 한국의 리스크를 낮추고 국가이익을 향상시키는 전략인가?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외교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가? 한국 외교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후보자들이 분명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미중 패권경쟁과정에서 한국이 펼쳐야 할 외교 전략의 거시적 프레임이 무엇인가?

다음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중간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이 펼칠 외교 전략의 방향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향후 한국 외교 전략의 거시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에게 미시적인 이슈의 대응전략을 넘어서 한국 외교의 거시적인 구조를 제시하게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한국 외교가 처한 상황과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진단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이 미중 사이에서 펼칠 한국 외교전략의 거시적 대



강을 제시하고, 후보자간 차이점을 통해 쟁점화된 이슈에 대한 토론과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정부들의 외교 전략에서 이미 나타난 다양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떤 개선방향을 찾아갈 것인지 토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다.

## 2) 한국 외교의 거시적인 프레임을 바탕으로 미중경쟁 구도에서 발생하는 세부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한국 외교의 거시적 전략은 다양한 세부 이슈와 연결되어 질문되어야 한다. 후보들이 미시적인 측면에서 각 이슈들에 대한 임시방편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혹은 한국 외교의 거시적 전략에서 도출되는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시적 구상이 어떻게 미시적인 정책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후보들의 외교역량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북핵문제, THAAD 논쟁, 자유무역 이슈, 한일관계 등의 세부 이슈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지, 구체적 정책들이 거시적 전략의 원칙을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토론할 수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나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 ▶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외교 이슈들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이슈별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는 미중 경쟁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경제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외교/통상 분야 토론 의제 #2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b>토론 의도</b>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합의에서 기인하는 국내외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
<b>토론 질문</b>	<p>Q)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발표된 위안부 합의는 그 이후에 국내적 반발과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은 담화문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의 문구를 내세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 협상은커녕 국내외의 소녀상의 철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2015년 양국간 합의는 지난 정부에서 한일 양국 간 외교관계의 교착을 가져왔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 것이 현실입니다.</p> <p>후보들께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를 먼저 밝혀주시고, 국내적 갈등과 한일관계의 교착을 개선할 수 있는 위안부 합의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에서 1990년대에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위안부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잠복되어 있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으로 한일 양국의 역사적 미해결 과제로 위안부 문제가 부각된 이후 1991년 한국정부는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외교이슈로 제기하였다. 일본에서도 1992년 아사히신문에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발견한 위안부 자료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2년부터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방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고노 담화를 1993년 8월에 발표하였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의 모집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일본의 군과 관헌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노 담화 이후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서 한국정부는 기금형식의 해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후 한일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시민사회의 주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위안부 문제는 2011년까지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가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를 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일외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결단을 촉구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의 뜨거운 외교현안으로 재부상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시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합의는 도출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었지만,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2013년 이후 한일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갈등적 상황이 악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일 관계는 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주선으로 개최된 한미일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협의 개시에 합의하였다.

2015년 11월까지 13차례 개최된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 간의 인식 차이만 확인될 뿐이었지만, 2015년 12월 양국 외무장관의 공동 담화를 통한 합의가 갑자기 도출되었다. 2015년 12월 28일에 발표된 합의문에는 ‘군의 관여’, ‘일본정부의 책임통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 실시’, ‘일본정부의 예산조치’,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 자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합의에 대한 한국 내의 시민사회의 반발은 매우 강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의 철거를 위안부 합의의 조건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이면합의에 대한 한국 국내의 의구심도 증폭되었다. 국내적 합의가 부족한 가운데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그 존재 자체와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폭넓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안부 합의가 국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위안부 합의의 본질적 부분이 아닌 소녀상이 한일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이슈로 부상되었다. 2016년 12월에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면서 일본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2017년 1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주한일본대사가 최근 귀임했으나,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한일 양국 외교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에는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것이다. 쟁점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외교적 효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2015년 합의의 외교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 파기를 고민할 것인가이다.

위안부 합의의 외교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국내적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 반대로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모색한다면, 이로 인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에의 악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필요하다.

### 2)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바른 역사인식의 요구 속에서도 대일관계의 협력적 관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는 위안부 문제에 다른 모든 현안들이 매몰되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일외교에서 위안부 문제를 누락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일본 측이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적 문제제기에 대해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른 현안들에서의 협력 진전을 방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투트랙 외교(이슈별 분리 외교)가 방법론적으로 제기되는데 이를 위한 새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시민사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정부가 다시 지원할 것인가?
- ▶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근처의 다른 공간으로 이전해서 국가기념시설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취임 후에 한일정상회담 개최에의 선결조건이 있는가?

<b>외교/통상 분야 토론의제 #3</b> <b>&lt;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정책방향&gt;</b>	
<b>토론 의도</b>	<p>한국의 2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한미관계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뚜렷이 관찰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에 대한 각 후보들의 준비 상태 및 대응 방안 검증</p>
<b>토론 질문</b>	<p>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 수년간 공들여 완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에서 탈퇴하였으며, 뒤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들의 재협상, 또 대미무역흑자 폭이 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US Free Trade Agreement)은 재협상 대상 자유무역협정으로 고려되고 있고, 대미무역흑자 폭이 큰 한국 역시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외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국의 상황과 대미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는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p> <p>후보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아가야 할 것인지, 특히 안보와 경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미관계에서 대미 통상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해방직후 일방적인 공여, 수혜국 관계였던 한미 경제 교류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의존의 관계로 진화되어 왔으며, 2016년 현재 한국의 대미수출액은 665억달러로 대중수출액에 이어 한국의 무역 상대국

중 두 번째로 높고, 대미수입액은 432억불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내 경선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이 공약은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주의 통상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미국 중산층 이하, 노동자 계층에게 특히 유효하게 작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존의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뒤이어 지난 23년간 지속되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들의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다. 재협상의 대상이 되는 자유무역협정들 중에는 2007년 합의되어 2012년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ea-US Free Trade Agreement)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 대미무역흑자 폭이 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대미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7년 5월 취임하게 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특히 한미 간 경제 협력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맞물려 있으며, 따라서 한국 새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은 한미 간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어떤 구체적인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인가? 또한 재협상 시 한국 측에서 미국에 요구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일정부분 들어준다면 이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인수 위원회를 통한 준비기간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당선 확정 순간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통상압력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가능성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후보자 별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재협상시 무조건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이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경우 이를 어

떻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2)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표 이후 매년 약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는 국가군에 한국이 포함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각 후보들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만약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은 가능한가?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현재 통상 분야의 외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금융 분야의 외교는 기획재정부, 경제 분야 이외의 외교는 외교부가 담당하는 외교의 분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이러한 외교의 분업화의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며, 외교 분야 편제의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미관계 속에서 경제협력은 경제협력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의 협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외교, 안보 협력이 경제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경제협력과 외교, 안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 분야 토론 의제 #4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와 China Plus One 전략>	
토론 의도	한국의 과도한 대 중국 경제의존도에서 비롯되고 확대된 경제산업적, 국제안보적 위기상황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
토론 질문	<p>Q) 현재 한국의 대 중국 경제의존도는 수출입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략 25%~30%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 인접 국가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가 정치경제적, 정치안보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p> <p>더구나 2016년 이후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또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경제 제제가 현실화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현재의 한국의 대 중국 경제의존도가 정말 지나친 것인지,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주시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국이 국제정치경제 관점에서 어떠한 전략적 위상과 현실에 처해있는 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강력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며 글로벌 최강국인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정확히 어떤 경제적 정치적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외교적 지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국이 대처하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최적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심각한 대중 경제의존도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안보를 모두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안보질서 안정과 경제협력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경제협력과 안보에 관한 연관성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 먼저 자유



주의적 이론가들은 경제협력은 전쟁을 비롯한 모든 안보불안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평화적 질서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많은 사례연구와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협력이 (지역)안보질서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보였다. 반면에 현실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는 이론가들은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은 또 다른 형태의 취약점(vulnerability)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현실주의자들에게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은 시장과 자원의 독점적 혹은 최소한 자급적 획득을 통해 벗어나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인 것이다. 냉전이 시작하기 전 강대국 간 전쟁이 대부분 경제협력이 최고조에 다다른 순간 발생했다는 점은 경제협력과 평화 간 양의 관계가 허구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꼽힌다.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도에서 기인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 대중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태국, 베트남, 홍콩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을 추진하고 있다. 사드문제로 여실히 드러난 대중 경제의존성의 문제는 이제 국가 통상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한국의 대 중국 경제 의존은 어떠한 상황인가? 한국의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상대적으로 높은 것인가?

2) 한국의 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음으로써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 리스크는 무엇인가?

3) 한국의 대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전략과 같이 한국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아프리카와의 경제 상호 의존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한국의 대일본, 미국 경제 관계

- ▶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경제 관계
- ▶ 한국의 대 중국 및 타 국가들과의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의 분리와 혼합 (예를 들어 경제적 수단을 통한 정치적 압박)

### 3. 경제 분야 토론의제

경제 분야 주제	주제별 의제
I. 경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민주화 방안</li> <li>■ 재벌개혁</li> <li>■ 기업구조조정 정책</li> <li>■ 4차 산업혁명과 금융개혁</li> </ul>
II. 경제성장 및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장시대의 경제성장 전략</li> <li>■ 일자리 창출 정책</li> <li>■ 청년실업 문제</li> <li>■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li> </ul>
III. 민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경제</li> <li>■ 가계부채 (주택대출 문제 포함)</li> <li>■ 조세정책</li> <li>■ 소득불평등과 양극화</li> <li>■ 국민연금 운용방안</li> </ul>

경제개혁 분야 토론 의제 #1 <경제 민주화>	
<b>토론 의도</b>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각 후보의 이해 정도와 입장을 확인 및 추진 방안 파악
<b>토론 질문</b>	<p>Q) 지난 대선 과정이후 경제와 관련하여 경제 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현재에도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다소 충돌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경제 질서와 정치적 의미인 민주화를 합성시킨 용어인 까닭에 그 의미 자체를 놓고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후보께서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p> <p>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경제 주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데,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적 영향력을 경제 민주화의 걸림돌로 적시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어떠한 경제 주체나 영역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p> <p>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보호, 순환출자에 의한 대기업 지배력확보에 대한 규제,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후보께서 추진하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여 주십시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그러나 헌법 제 119조 1항은 “자유시장질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제의 민주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념적 입장에 따라서 상이한 해석을 바탕으로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원론적으로 볼 때 시장의 본질은 소비자들에 의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차별적 체제인 반면에 민주화는 정치적 평등을 지향한다. 헌법 119조의 1항과 2항을 종합하여 본다면, 경제 민주화는 좁은 의미에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의미할 수 있고 넓게 해석하면 소득 분배와 형평성과 안정적 경제 운영 및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나 사유 재산권이 일부 규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제 민주화를 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2항이 원칙이고 1항의 경제적 자유는 2항의 경제민주화 범주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경우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자유’보다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민주화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논쟁적이며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해석 여부에 따라서 경제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역시 매우 가변적이다. 따라서 각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이해 방식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 민주화가 차기 정권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각 후보의 이해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되어야 할 대상 역시 달라질 것이며 각 후보들이 어느 집단이나 세력을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들은 특정의 경제 세력을 규제 내지는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결여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할 경우 가장 손쉽게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나,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방안들은 사실상 역대 어느 정권도 실천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경제민주화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며 대기업 규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훼손을 의미하는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논리는 시장경제를 절대적인 사적재산권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사적재산권의 보호야말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평등은 매우 좁은 의미의 기회평등으로 치환되며 경제민주화는 자유로운 경쟁에 기반을 두는 시장경제와는 배치되는 개념이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근거로는 헌법 전문(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나라의 핵심가치이며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가 제도적 토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도 이러한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으며, 경제민주화 역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한 정책으로 비판한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반대 논리의 핵심은 시장경제를 절대시 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고 정책적으로도 소득불평등의 증가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이로 인한 정치적 반발로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조차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와 찬성 내지 반대 논리는 집권 이후 각 후보들이 제시할 정책의 근본적 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2)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은 결국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양극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규제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대기업 규제에 대한 반대 논리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 일수록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여 한다는 것인데,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졌다는 경험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각 후보는 ‘규제’와 ‘투자’를 양립할 수 없는 정책 대안들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기업 규제 정책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경제 민주화의 또 다른 측면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자들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한국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이들에게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후보들의 중소기업활성화 정책과 중소기업자들의 경제 활동 지원 방안들을 질문할 수 있을 것임.
- ▶ 2018년 정부 예산지침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겠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핵심분야로서 “양극화 완화”가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후보들의 공약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지에 대해 물음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의 변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혁 분야 토론 의제 #2 <재벌개혁>	
토론 의도	재벌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내부거래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입장과 정책적 대안 파악
토론 질문	<p>Q)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경제분야 정책공약 중 공통된 것의 하나로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재벌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규제와 행위 규제에 대해서 어떤 기본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p> <p>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산분리, 감사(위원회) 강화,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 등의 방안들이 제안되는데, 후보자들께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비정상적 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더불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벌기업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대선주자들의 경제적 측면의 정책공약 중 공통된 점은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다. 재벌기업에 대한 정책공약은 크게 구조적 측면의 규제와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나누어진다. 대선주자들의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는 재벌기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과거부터 내려온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들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따라 규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는 것은 후보들의 반기업, 반시장 혹은 친기업, 친

시장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재벌기업에 대한 시각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최근의 권력형 비리는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재벌기업을 피해자로 간주할지 동조자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해 후보들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중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와 감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산분리법 유지, 지주회사와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등이 중요한 이슈이다. 한편 ‘행위’에 대한 규제는 동일한 그룹 내에 소속된 계열사 간의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후보자들은 재벌기업의 규제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강화, 감사(위원회)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유사한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후보자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기업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차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방안을 통해 이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평가와 후보자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최근 국정개입논란에서 나타난 재벌기업과 정권의 정경유착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구조 규제와 행위 규제에 대한 강화는 필수적이다.

1)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의 필요성: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조 규제와 행위 규제에 대한 공약 및 정책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매번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정경유착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은 세부적인 전략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 없이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재벌기업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 재벌기업의 경우 이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경영인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오너의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재하여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



급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부의 세습과정에서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후보들은 재벌기업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현재까지 발표된 일부 후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구조 규제에 있어서는 4대 재벌 개혁을 위해서 크게 3대 과제를 도입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 다중대표소송,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재벌의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벌의 업종 확대 제한,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같은 재벌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공약하였다. 더불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재벌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을 공약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를 5년으로 늘리는 등 독립성 강화를 공약하였다. 또,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통제 강화에 관하여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공약하는 실정이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재벌기업의 구조적 규제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기업 총수의 사면, 복권 금지를 공약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의 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사익 추구를 막는 '서미경 방지법'을 공약을 한 상태이다.

### 3. 연관의제 및 추가 질문

▶ 후보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고, 재벌기업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 및 정책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 공정위 개혁 또는 개편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 ▷ 구체적으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한 입장.
- ▷ 전속 고발권의 존폐여부를 떠나,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특히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독립성이 다시금 이슈가 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 우려되며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도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존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전속 고발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근거는 (1)불공정 행위에 대한 미미한 고발조치로 피해자 구제 미흡, (2) 전속 고발권이 일명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 (3)공정위의 인력부족, 수사권 미비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고, 반대로 전속 고발권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1) 현재 공정위의 실적이 상당하고, (2)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전속 고발제를 폐지했을 경우, 현실적, 실질적 피해자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될 것이라는 점, (3) 그리고 상대적으로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장한다면, 폐지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속 고발권의 존치 여부를 떠나서,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현 정부가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해야 한다.

경제개혁 분야 토론 의제 #3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개입의 방향성과 정책>	
<b>토론 의도</b>	최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현재 구조조정 중이거나 구조조정이 완료된 사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성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최근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치권의 의지가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와 같이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 동시에 기업자구안의 규모 및 고통분담이 관련 하청업체에만 전가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p> <p>(1) 후보자들께서는 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개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2) 그리고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방향이 적절한지, 또한 최근한국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칙아래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5월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가 지원은 없다”던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 9,00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은행과 회사채 투자자의 50% 이상 출자전환을 통해 2조 9,000억 원의 자본 확충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3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절반씩 분담하는 형식이다.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을 투입한 지 1년5개월 만이고,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지원이 최종적으로 실행된다면, 출자전환, 만

기연장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0조 9천억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조선업은 고용효과가 크고 조선기자재 등 다수의 관련업종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하고 협력업체 부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여 기업을 희생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업의 고급 기술 인력과 주요 설비는 차후 경기 회복에 대비하여 산업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더불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재 어려운 시기가 2~3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돼도 정부 주도의 운항, 해경정 등 조기발주를 추진을 정부에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과 정치권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도 또한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STX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의 주도아래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부실에 대한 지원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2016년 6월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하여 정부는 “추가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란 그간의 공언을 뒤집은 데다, 신규 지원으로도 대우조선해양이 살아날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세금 투입을 놓고 절대 무너뜨리지 말았어야 할 국민과의 신뢰에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지난해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을 때와 달리 대우조선해양에는 지원을 거둬 주는 것을 두고도 “결국은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 원칙도, 컨트롤 타워도 없이 엇박자를 반복하며 시장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개입의 방향성과 정책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개입과 시장논리: 시장논리에 따라 파산해야 할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칫하면 시장에 ‘좀비기업’을 양산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반면 현재의 단기적인 위기만 극복하면 될 기업을 무조건 파산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 장기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일 수도 있다. 또한 실제 고용주의 경영실패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대기업 또는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만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현실과 그러한 선택적인 정부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형평성과 위화감 문제 또한 존재한다. 결국 어떤 기업을, 얼마나, 언제까지 정부가 지원 및 개입하느냐와 관련된 원칙 및 방향성이 중요하

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개입의 국정철학, 원칙, 청사진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

2)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하여, 대주주와 경영진, 채권단, 근로자의 고통분담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합리적인 시장 논리보다 지역 및 근로자 ‘표심’을 염두에 둔 득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결국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정부개입 및 지원의 경우, 정부가 고려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무엇인지? 더불어 기업 및 노조의 고통분담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에 대한 문제로서,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하여 다음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을 어떤 방향으로 최소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관의제 및 추가질문

- ▶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연금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만약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 연금은 어떠한 우선가치를 가지고 개입을 해야 하는 가?
-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책은행들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현재 기업구조조정과정에 있어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이 존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금융채무의 경우, 산업은행이 약 5조1000억, 수출입은행이 10조2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할 경우 이들 국책은행들 또한 위험한 상태이기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의 상태는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 있어 노조와의 마찰 같은 부담을 피하면서 정치적으로 쉬운 방법인 국책금융기관이 일단 부실을 떠안고 정부는 다시 국책 금융기관에 재원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책은행들 또한 한계상황에 몰린 현실에서, 정부가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치금융의 구조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중요한 의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개혁 분야 토론 의제 #4 < 4차 산업혁명과 금융개혁 >	
<b>토론 의도</b>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는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히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디지털 금융 산업 시대에서 첨단기술의 접목이 활성화되면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의 법제도는 이런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신산업의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의 법제도적인 환경이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얼마나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한국경제 성장을 위해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면 그 방향성 및 내용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지난 수십 년간 세계경제를 지배해 왔던 일반적인 경향은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인식 하에 탈규제 또는 자유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금융부문에서의 탈규제 및 자유화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이 그 어떤 분야보다도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국경제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면서 금융부문에서 1980년대부터 다양한 탈규제 및 자유화 조치들을 추진하여 왔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은행민영화, 1988년 이후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확대, 1988년 ‘자본시장 국제화와 단계적 확대추진계획’을 통한 자본자유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 법정지불준비금 인하 및 일반자금대출 비중 확대 등 다양한 금융자유화 조치들이 금융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그러나 탈규제 및 자유화 조치들은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금융자유화 확대와 함께 세계경제는 빈번한 금융위기에 휘말리는 부정적인 측

면도 노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탈규제 및 자유화가 만능처방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을 규제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현재 한국사회에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이슈화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2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1) 첫째는 금융개혁 필요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이다. 현재 정부 및 금융관련 중사자들의 대다수는 국내 법제도의 규제적인 요인들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들은 탈규제 및 자유화 조치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더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빠른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탈규제란 금융개혁이 자동적으로 한국의 신산업 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2) 둘째, 현재 은행법, 금융투자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업 등과 같은 기존 금융 관련법은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포지티브 방식을 먼저 시장에 출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금융개혁이 이루어질 때 핀테크 및 인터넷은행 등과 같은 신 성장산업이 규제를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는 이런 금융개혁 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금융개혁은 가계부채 의제와도 연관된다. 최근 들어 정부는 ‘제3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하나가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고금리 관행에 대해 손보고 대부업체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환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들은 정부의 개혁방안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개혁안이 가능한 것인지, 혹시 인위적인 강제가 경쟁력이 취약한 제2금융권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 금융개혁은 재벌개혁이란 의제와도 연관된다. 지난 수십 년간의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과 소유 장벽을 대폭 완화시켜 재벌기업의 진출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재벌기업들은 과대한 부채의 존적인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었다. 기존 금융개혁의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재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바람직한 금융개혁의 방향성과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시각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분야 토론 의제 #1 <저성장 시대의 경제성장 전략>	
<b>토론 의도</b>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가 장기적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문제의 주요 원인 및 대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한국 경제성장률이 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 이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은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성장둔화는 한국경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현상으로서,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요소투입형 경제정책과 수출주도성장전략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p> <p>저성장의 추세와 한국형 장기불황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p> <p>후보들께서는 한국형 장기불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정책의 비전/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방향성 아래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정책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국경제는 최근 10년간의 저성장의 기조가 지속됨으로 장기 저성장시대 또는 한국형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성장률은 노무현 정부 평균 4.3%가 이명박 정부 5년간 2.8%로, 2013년에는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6%로 3%이하의 저성장기조를 보이고 있고, KDI의 전망에 의하면 2017년 또한 2.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내수 증가세도 둔화되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성장의 추세와 한국형 장기불황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

나 2017년의 현실은 위기의 심각성,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낮아진 성장잠재력으로 인하여 단순히 수많은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 및 실행을 지양하고, 문제의 진단에 따른 장기적 비전아래 정책의 중대성 및 시급성에 따라 그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과감하게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에서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된 한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에 대한 재구성 및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될 다음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할 성장전략의 비전과 정책들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오늘날의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5년간은 세계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출, 생산, 소비, 투자, 그리고 일자리 모두 하락세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추세적 하락세와 내수 침체는 노령화로 대표되는 한국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 이러한 경제현실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경제를 주도해온 요소 투입형 경제 정책 및 수출주도성장전략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수출주도 성장체제에서 낙수효과의 상실, 생산과 소득의 괴리 등의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에 수출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였다는 지적이 많이 존재한다. 한국경제를 주도해온 대기업중심의 수출 성장체제는 지속가능한 것인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은 필요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이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가령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공약,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1인당 4만 달러 달성 공약들과 같이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숫자가 난무하였으나 이들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은 경제성장 숫자를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들을 중심으로 경제공약을 제시하고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조세 수입 증대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일 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청사진 없는 일자리 정책은 많은 문제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3)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저성장 추세에 대한 해법으로서 “창조경제(박근혜 후보)” ‘공정경제(문재인 후보)’ “혁신경제(안철수 후보)” 등과 같은 대안적 성장패러다임이 제시되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러한 비전에 따라서 정부정책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회의적이다.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에 대해 어떠한 진단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비전아래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적정성이 설득력이 있는 지를 파악한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1)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후보자들이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고, 이는 어떠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는 지를 파악하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경제성장 비전 및 전략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부합하는 지를 파악

2) 2018년 정부 예산 지침의 4대 핵심 분야로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한국사회에서도 키워드가 된 듯하다. 그러나 국민들뿐 만 아니라 정부관계자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이것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3) 일반적으로 과거 산업혁명이 물질(1차와 2차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생산)과 정보(3차 인터넷 및 정보화에 관한 산업혁명)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번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생산과 소비를 넘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연결된 지능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IT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의 변화는 전통적 생산과 소비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나 애매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생산-소득-소비 확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우리 경제를 주도했던 전자(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 등의 제조업은 재편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는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후보자들의 이해와 그 변화에 대한 대책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분야 토론 의제 #2 <일자리 창출 정책과 그 실현 가능성>	
<b>토론 의도</b>	일자리창출에 대한 청사진과 정책,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파악
<b>토론 질문</b>	<p>Q) 모든 선거에서 항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이 무수히 남발되었지만, 현재 한국의 실업인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p> <p>일자리 창출이 바로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같은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라고 하여도 과연 아닐 것입니다.</p> <p>후보자들께서는 우선 왜 최근의 일자리 정책들이 실패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주시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시된 정책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부탁드립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2017년 한국은 최악의 고용빙하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월의 실업자 수가 135만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그 추세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2%를 넘어서고 있고,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하고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일자리의 수 뿐 만 아니라 고용의 질 또한 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올해의 일자리 창출예산은 약 17조 원에 이를 만큼 당면한 실업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소위 '고용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는 저성장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은 구직난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더불어 실천 가능한 정책들이 과감하게 실행되어

야 할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 또한 우선적으로 일자리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은 기존의 정부정책들이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진단도 없이 뜬구름 같은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현재의 실업대란에 대한 진단을 물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공약들이 서로 모순적이지는 않는지, 재원확보 등 실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이명박 정부의 7% 경제성장, 박근혜 정부의 4% 잠재성장률 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들과는 달리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들은 보다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공약들은 크게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증대,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개선,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2016년 기준)보다 347시간이 많은 2113시간으로서 멕시코에 이어 2등인 것이 현실이다. 후보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자의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몇 십 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임금하락을 의미하기에 불만이 있을 것이고,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추가고용을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있다.

2) 더불어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납품물량, 납기일 등을 못 맞추고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다 도산, 폐업에 몰리게 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경제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공약의 경우, 현재 100만 명 수준의 공무원을 약 50-80% 증원하여 최대 약 80만 명까지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존재한다. 공무원의 증원은 예산의 일회성 지출이 아닌 지속적인 인건비 지출을 의미하기에 이를 위한 국민들의 추가세금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러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부분에 있어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분에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세월에 의존해 창출하는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그 만큼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완화하

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등이 주된 내용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임금인상과 일자리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지가 의문이고, 정부의 지원방안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평균이 대기업의 약 60%로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하여 격차가 큰 편이고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정부주도의 정책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에 의존적으로 만들어 현재 한계에 부딪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개선하는 노력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취지는 좋은 것이나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다. 기업의 임금부담을 올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법으로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정책 또한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위축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4)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강조점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인지 시장에 의한 창출인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름으로 어떠한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장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은 기업 및 노동시장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에 실현 가능한 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공공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부의 의한 직접적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쉽게 실행가능하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겠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진출 제조업의 국내 회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내회귀가 바람직 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 ▶ 최악의 고용빙하기라는 현실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과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을 자영업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자영업자는 약 553만 명이고 그 추세 또한 증가세이다. 자영업자의 상황도 연간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약 22%이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창업 5년 만에 70%는 폐업을 하고, 자영업자의 빛이 전체 가계부채에 차지하

는 비중이 거의 40%에 다다른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의 현실은 그 규모 및 성격이 악질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관된 문제로서, 자영업 문제에 대한 장기적, 단기적 정책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분야 토론 의제 #3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 및 대책>	
<b>토론 의도</b>	청년실업률이 12%를 넘는 현실에 대한 후보자들의 원인 진단과 정책 대안 파악.
<b>토론 질문</b>	<p>Q) 한국의 청년의 90%가 ‘헬 조선’에 공감하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약 45만명, 청년실업률이 12%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구백’ ‘4포세대’ ‘5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와 같이 청년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자조적인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후보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p> <p>청년실업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의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된 문제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의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변화하는 인구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p> <p>후보들께서는 현재의 청년실업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구조적 변화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관된 의제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변수로 인하여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보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된 의제로 선정하였다. 소위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매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고, 이들이 결혼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90년대 초반으로서 매년 평균 70만 명 이상 출생하였다. 90년대 태어난 이들이 현재 20대 청년들이다. 그러나 이후 출생아의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2016년에는 41만 명에 그쳤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이후 20대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동력이 오히려 부족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인구구조의 변화추세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에 반영이 되어있기에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감소로 청년실업이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할 수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청년층의 경우 고용의 질 또한 나쁘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구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의 불안정성, 더불어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 신용불량의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비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여 고용불안정성, 낮은 임금으로 청년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우리의 인적자본을 매우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 그리고 소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대응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인 인구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할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었고, 이는 전체실업률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고학력 청년 실업자의 비중도 높고, 취업포기자, 단시간 근로자 또한 많기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인식 또한 절망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어, 청년실업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2) '열정페이'와 수많은 '인턴제도'에 대한 비판이 담고 있는 청년들의 불만은 바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하락하여 우리의 인적자본을 매우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원청과 하청기업의 격차가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이 청년실업/고용문제를 확대하고 있고, 창업과 신산업 부분의 경우 열심히 일하지만 낮은 임금과 창업생태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에 잦은 이직 및 실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비중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이들이 안정된 고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가진 직업이나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동시에 찾아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청년고용의 문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인 인구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 가령 소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 이후 청년인구 감소로 청년일자리문제가 수치상으로는 그리 심각해 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식과 기술을 축적할 수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단기적인 정책들은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기에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의 흐름과 부합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여 어떤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4)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공공부분 일자리 증원 및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정책 등은 재정 부담이 영구적으로 많아지거나 실업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논란이 있다. 또한 은퇴를 맞이하는 근로자와 청년이 고용을 나누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정책은 청년실업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임금수준 및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존재한다. 후보자들의 공약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청년실업과 관련된 문제로서 직무교육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교육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의 차이는 존재한다. 많은 청년층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 추가적인 직무교육을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고등학교나 대학이 직무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고, 기업 또한 직무교육의 비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해결책은 있는 지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분야 토론 의제 #4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	
<b>토론 의도</b>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비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저출산/고령화라는 추세에 대한 원인 및 진단 대하여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에게는 노후소득 대비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치적 선호를 고려한 정치공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 및 대비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입니다.</p> <p>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추후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제전반에 가져올 부정적 시나리오 한 가지를 상정해보겠습니다.</p> <p>저출산/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출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비 등 복지관련 정부지출의 증가와 국민연금의 수지구조 악화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특히 혁신기술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노동공급측면에서 혁신산업의 발전이 저하되는 동시에, 혁신상품의 수요 측면에서도 첨단제품에 대한 고령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기에 첨단산업의 수축 또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p> <p>우리의 경제가 첨단산업의 수출을 통해 성장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영향은 그리 우호적이 않은 듯합니다.</p> <p>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생각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대응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노령화라는 추세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

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경제전반에 미칠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이상 인구 비율이 2030년에는 32%, 2040년에는 4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60세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미칠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복잡하고 그 변화의 수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감소와 저축률의 하락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정부의 복지관련 의무지출 확대가 불가피 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 및 투자형태도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인구노령화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인구구조변화는 산업 및 금융 등 경제전반에 있어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출산/인구노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들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담당해야 하는 청년층의 감소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의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기반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성장잠재력의 약화 뿐 만 아니라 소비, 저축, 주택, 노년 대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혁신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첨단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저연령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연령 근로자의 비중감소는 첨단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상대적으로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은 고연령자의 비중 증가에 의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 또한 첨단산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구고령화가 제조업의 비중을 저하하고 특히 첨단/혁신산업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저성장 기조에 대한 대책으로서 창조경제, 혁신경제, 공정경제 등으로 표현되는 대안적 성장패러다임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에 있어 인구구조변화가 가

저울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시장제도, 고용정책, 기업들의 인력정책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0년에는 이미 전체 노동력이 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40%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형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경제활동의 양상은 자영업위주이고, 임금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형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의 인사정책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고령기의 취업기회, 고용안정, 은퇴이후 생활안정에 있어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분야의 정책들 특히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 재정적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조세수입의 감소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가져오는 재정압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율을 높이거나 연금수혜를 줄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세대 사이에서 소득의 분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책변화로 인한 고통 및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한 사안이다.

5)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정책과 이민정책과 같은 양적전략(quantity)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고령층의 노동력의 활성화를 위한 질적인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제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근로자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출산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저출산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민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

<b>민생 분야 토론 의제 #1</b> <b>&lt;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경제&gt;</b>	
<b>토론 의도</b>	<p>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이 한국사회에 미칠 주요한 영향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취해야할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p>
<b>토론 질문</b>	<p>Q)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Fed)은 2015년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여 왔으며 지난 15일에도 기준금리를 연 0.50-0.75%에서 0.75-1.00%로 인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따른 ‘초저금리 종언’ 시대가 한국사회에 가져올 중요한 파급효과들이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미국은 2015년부터 기준금리를 0.25%씩 조심스럽게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의 초저금리로 인해 미국 자산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를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고용율 지표도 개선되면서 경기가 향상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미국 금리 역사를 보았을 때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40년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크게 4번 정도가 있었다. 1979-1982년, 1988-1990년, 1993-1994년 그리고 2004-2007년이다. 그런데 1979년의 금리인상은 남미부채위기를 야기하였고, 1988년 경우는 미국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유발시켰다. 1993년 경우 미국 내 강력한 반발 세력에 의해 좌절되었고 2004년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를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내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그리 호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가져올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들을 마련하여 과거 미국 금리인상의 역사가 유발시킨 어두운 결과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으로부터 한국사회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연준(Fed)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들은 많지만 현재 한국경제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이슈 쟁점들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1) 첫째, 흔히 신흥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이탈의 문제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 수준에서 계속 동결하면서 미국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조만간 역전현상이 일어나 미국 금리 > 한국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본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여파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후보자들은 한국에서 자본이탈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우리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2) 둘째,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이다. 연준(Fed)의 금리인상은 시중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1344조 3000억 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 특히 저신용자,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이 난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부채탕감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3) 셋째, 금융안정성의 문제이다.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성이 양호한 편이기에 금리인상에 따른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들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자기자본비율도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대외 지급능력이 안

정적이며 외환보유액도 증가하였기에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금융안정성은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정부의 이런 시각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를 정부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안이한 시각이라고 생각하는지?

4)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문제이다. 연준(Fed)의 금리인상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만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률을 높이고 이것은 국내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대출 금리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억제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경제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후보자는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금리인상의 문제는 주택·부동산 시장 및 환율 문제와도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다. 먼저 금리인상은 단순히 주택·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넘어 하우스 푸어(house poor) 세대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마저 야기할 것이다. 이는 이미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금리인상은 이런 악몽을 다시 유발할 것이 확실시되기에 금리인상 문제는 한국정부가 빠르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2014년 완화시켰던 주택담보안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규제 강화시키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런 규제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 ▶ 금리인상은 환율문제와도 연관된다. 연준(Fed)의 금리인상은 미국 달러가치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GDP 대비 7%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야기하는 동시에 현재 미국이 문제시 삼고 있는 환율조작의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한국정부는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미국의 환율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하는지?



<b>민생 분야 토론 의제 #1</b> <b>&lt;가계부채의 증가&gt;</b>	
<b>토론 의도</b>	현재 한국경제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를 바라보는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b>토론 질문</b>	<p>Q)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해 11.7%의 부채증가율은 2010-2014년 평균 6.9%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p> <p>후보들께서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국경제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2년 464.7조원에서 2008년 723.5조원, 2013년 1019조원 그리고 2016년에는 1344.3조원으로 증가한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사실은 GDP 대비 89.3% 수준까지 육박한 지난해의 가계부채 수치가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BIS가 경고한 수치인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 6.9%를 훌쩍 뛰어넘는 11.7%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한국경제성장에 더욱 더 큰 부담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명료해 지고 있다.

한국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방식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긴축 & 감세정책, 재정건전성 및 작은 정부 유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주택·부동산 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였고 가계부채는 이런 성장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연준(Fed)의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가계부채에 의지한 단기부양책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무대책으로 방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가계

부채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올바른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는 조만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첫째, ‘부채주도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추진되어온 ‘부채주도 성장’은 한국경제에 가계부채 증가라는 문제를 유발시켰다. 더욱이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연준(Fed)의 금리인상과 맞물리면서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방식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소득주도 성장’ 방식이 국내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 즉 친자본적인 정책에서 친노동적인 성장분배정책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 방식은 한국경제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 둘째, LTV & DTI 규제 문제이다. 가계부채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채주도 성장’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안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다. 이 당시 정부는 LTV를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정부는 고정금리에다 월금도 나눠갚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다시 규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은 LTV & DTI에 대한 재규제와 같은 정부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3) 셋째, 금리인상에 노출되는 고위험가구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소득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증가세가 부채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준(Fed)의 금리인상을 따라 국내 시중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채의 약 7.0%로 추정되는 고위험가구의 부담률

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더욱이 통계에 잡혀있지 않는 자영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금리인상과 함께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들에 대한 부채탕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부채 탕감은 도덕적 해이라는 악순환을 낳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우리의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에 의한 자산증식효과가 대단히 크고, 부동산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근로소득보다 높은 현실, 그리고 부동산거래에 따른 불로소득이 높아 가계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마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문제는 한국사회의 부동산/주택문제와 연관이 있기에, 특히 한국의 전세제도라는 임대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매매 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은 2009년 50% 정도에서 현대 약 70%를 넘어가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전세 값의 급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 또한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관련 대출의 부실률이 올라가고, 이는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또한 이는 소비감소,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자영업 위축,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들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에,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 ▶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득불평등 문제와 연관된다. 2014년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40% 소득은 전체 2%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 양극화가 크게 심화되고 있음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고위험가구들의 부채상환 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득불평등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높은 임금격차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개선과 같은 정책이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후보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b>민생 분야 토론 의제 #3</b> <b>&lt;조세정책&gt;</b>	
<b>토론 의도</b>	노령화, 저소득층 지원, 실업 지원금 등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에서 어떠한 조세 정책으로 복지 수요와 재정 적자 간의 간극을 줄여 나가려 하는 지에 대한 검증 필요
<b>토론 질문</b>	Q) 최근 각 후보들은 조세 정책을 놓고 첨예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기존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차기 정부에서 증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증세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우리나라의 재정은 2008년 이래 현재 까지 매년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6년까지 재정적자 규모가 95조원을 넘어 이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재정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특별한 세입 확충 정책이 없는 한 적자를 보전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복지제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도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후보들은 조세 정책에는 이견이 있지만, 기본소득세 도입 등 복지 정책의 확충을 공약한 상태이다. 기본소득 이외에도 저소득층지원과 실업 대책, 중소기업 육성 등의 복지 및 재분배 관련 공약은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복지 정책의 유지만으로도 재정 적자의 증가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점증하는 복지 정책의 확충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방치하지 않는 한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 후보의 복지 정책에 걸맞은 재정 확충 방안, 재정 적자의 축소 방안은 조세 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각 후보가 내세우는 복지 정책의 현실성을 조세 정책과 연관시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조세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조세의 선택 문제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 비교적 명확한 상충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단일 세율의 소비세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세율이 부과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에 대한 세금은 자본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되지만, 자본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유한 계층이라고 전제한다면 형평성 면에서는 바람직한 세금이기도 하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누진적 세율구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할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성 손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상충관계 속에서 조세 정책의 선택은 국민들의 후생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각 후보들은 조세 정책의 이러한 상충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2) 증세문제에 있어 초점이 되어버린 법인세에 대한 입장. 문재인 후보의 경우 법인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후보는 지난 3월 26일 민주당 대선 후보 방송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한꺼번에 8%포인트 올려 30%로 하자고 공약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2.8%인데다 갈수록 낮추는 추세로, 우리가 한꺼번에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게 올리면 세수는 증대되겠지만 우리 기업과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유효세율(법인세 실효세율을 의미하며 전체 세전 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자산 규모 상위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들의 세전 순이익은 50조7710억 원으로 8.7% 증가였으나, 유효세율로 볼 때 2015년의 법인세 납부는 전년보다 2.8% 감소하였다. 이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유효세율)로 환산하면 17.6%로 미국 26%, 독일 29.55%, 영국 28% 보다 크게 낮게 나타난다.

3) 한편에선 실효세율이 국가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국제 간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 명분이었던 법인세를 낮추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각 후보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법인세의 유효세율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각 후보의 대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만약 법인세 인상이 불가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 대안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또는 국민의 대다수 특히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간접세 인상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는 확인해야 한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조세형평성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슈로서, 2015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조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있다. 근로자의 유리지갑만 텅리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 급격한 세제 변화는 어떠한 정권에게도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세 정책에 대한 선거 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세 정책 플랜을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떠한 형태의 증세이던 강력한 정치적 반발을 있을 것이고, 특히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 증세 정책의 경우 그러한 현실에서 예측되는 정치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파악.

<b>민생 분야 토론 의제 #4</b> <b>&lt;소득 불평등과 양극화&gt;</b>	
<b>토론 의도</b>	<p>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 검증</p>
<b>토론 질문</b>	<p>Q)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그 정도와 불평등 심화 비율의 증가 속도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p> <p>소득 양극화의 대표적인 측정지표인 소득집중도를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심화 정도와 증가 속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Sharing the Growth Dividend : Analysis of Inequality in Asia」, IMF Working Paper, 2016.3)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의 29%에 비해 2012년에는 45%로 약 16%p 증가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집중도 상승률은 53.8%로써 가장 빠르게 집중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2016)는 이를 근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부분 상위 10%의 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p> <p>(1)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2) 그렇다면 후보께서는 소득불평등 문제의 해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3)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불평등 문제해결이 시대정신인 듯하다. 최근 불평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 불평등의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다수의 저소득

계층의 소비력을 고갈시켜 경제적 후생복지를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범죄를 조장하는 등 광범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구조 조정, 조기 퇴직의 관행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불평등의 심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득 불평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영향, 해법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나 학계 및 정치권의 합의의 부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현상을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브렉시트, 트럼프 현상으로 대변되는 유럽과 미국 정치의 극우화,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볼 때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이라도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 후보의 소득 불평등이 야기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선거 공약적 정책공약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의 침체기 속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저성장 국면에서 차기 정부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 내지를 완화를 위한 진진한 정책적 고민을 지니고 있는 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 다음으로 소득 격차가 큰 나라이다. 소득불평등은 1998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급격히 증가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은 진보 정권이던 보수 정권이던 별 차이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정권의 성격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보수적 정권들 소득 불평등 문제를 등한시하고 진보적 정권들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보다 관심을 가졌다거나, 역으로 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보수적 정권하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여 보수적 정권들이 소득 불평등 문제에 더욱 잘 대처하였다는 논리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소득 재분배 제도가 거의 부재한 제도적 문제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 그리고 노동조합조차도 대기업의 노동자들만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 문제에서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의 문



제는 시장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이며, 정치의 적극적 개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용인하고 어디까지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국정철학을 살피고, 소득 재분배의 방법, 재원의 마련, 예상되는 정치적 반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세계적 경제 침체와 저성장 시대의 소득 분배에 대한 입장: 각 후보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인정하는 후보라면 결국 그 정책은 소득 재분배 정책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폭적인 감세와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한 분배 정책의 형태이거나, 세수 증대나 정부 재원의 전용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분배 정책이 될 수 있다. 이 중 전자, 즉 증세는 상당한 정치적 저항과 반발로 어려울 수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4) 문제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이미 저성장 국면에 있기에 세수 증대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고도 성장기의 한국 경제에서 소득 불평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소득 재분배 구조가 부재함에도 전체적인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별다른 분배 체계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해 격차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성장 경제 시대에 불황이 겹쳐질 경우, 소득 증가가 이어지지 못하고 전체 국민 소득 규모가 담보 상태일 때는 소득 재분배는 부유층의 몫을 저소득층으로 직접 이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바람직한 지, 정치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불행하게도 향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은 저성장 내지는 불황이 지속될 것이 유력한데, 각 후보들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은 이와 같은 상황 인식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치적 계획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이전처럼 선거용 공약, 헛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소득불평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점차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없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금수저, 흙수저 등의 신조어로 나타나고

사회 곳곳에서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저항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보자들이 이러한 계층의 고착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책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후보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 관련하여 현재의 상속증여세 수준에 대한 견해, 자본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수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
- ▶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 파악. 과거에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었던 교육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입시제도로 인하여 이제는 교육이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할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개혁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b>민생 분야 토론 의제 #5</b> <b>&lt;국민연금 운용방안&gt;</b>	
<b>토론 의도</b>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b>토론 질문</b>	<p>Q)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와 같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경제적 개입에 관한 스캔들, 더불어 국민연금의 수령액 및 적립금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연금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p> <p>(1) 국민연금의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후보들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p> <p>(2)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상태가 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공사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p> <p>(3) 후보자들께서 제시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선정 이유

공적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연금재정의 장기안정과 미래 원활한 연금급여지급을 위하여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는데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개입하는 사건처럼, 기금운용목적과는 다르게 외압에 의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연기금이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저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의결권 행사를 주관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아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권 개입이 쉽게 근절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크게 문제되어 왔던 정경유착 근절 정서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은 후보별로 강약구분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후보자들은 사회 복

지 개선을 위한 공적연금액 인상에 있어 소득대체율 및 최저연금액 인상, 출산크레디트 첫째 아이부터 적용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반면에,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인식과 입장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만큼, 유권자의 평가와 투표선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국민연금이 국내증시에 투자하는 금액이 절반 이상을 국내 10대 그룹과 그 계열사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행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이 오히려 재계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소액 주주 및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

2) 기업이 재벌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기관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상법에 명시된 주주제안권이나 이사 해임청구권 등을 통해 기업 가치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기관투자자로서 이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정치적인 외압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다. 국민연금의 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의가 보건복지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의사결정기구의 약 30%가 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수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여, 투자 관련 경험이 없는 전(前) 정부 관료가 국민연금의 운용을 총괄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관투자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문제와 국민연금의 공사화에 대한 찬반여부 및 기존 국민연금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질문

- ▶ 학계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당초 발표됐던 2060년보다 8년 앞당겨진 2052년에 고갈 되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노후에 받을 공적연금액에 대한 공약들은 대부분 공적연금액을 인상하자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세대 간 소득재분배라는 사회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이 자칫 세대 간 소득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후보자들의 실제로 공적연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 국민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충당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 4. 사회 분야 토론회

사회 분야 주제	주제별 의제
I. 복지-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복지정책과 재원마련방안</li> <li>■ 저출산·고령화 문제</li> <li>■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li> <li>■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li> </ul>
II. 교육-과학-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li> <li>■ 4차산업혁명과 교육정책</li> <li>■ 과학기술 역점분야</li> <li>■ 신재생에너지</li> </ul>
III.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범죄문제와 사회통합</li> <li>■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li> <li>■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li> <li>■ 다문화정책</li> <li>■ 한류정책</li> </ul>

복지-여성 토론 의제 #1 <핵심복지정책과 재원마련방안>	
토론 의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핵심복지정책 및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 검증
토론 질문	Q)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연적이고,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를 위해 가장 핵심이라 생각하는 복지정책은 무엇이며, 이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 정책을 추진 및 유지함에 있어서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장 중심적 경제 패러다임이 중요했지만, 경제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 및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구제하거나, 실업 및 산업재해 등 복잡한 산업화 시대에 나타나는 이른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s) 구축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관련 이슈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복지 활동에 대한 국가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필요한 복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복지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비전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가족과 친척이 해결하는 이른바 ‘가족주의형 저발전 복지국가(familialistic underdeveloped welfare

state)’이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가입국중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단 한번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있어 최하위 또는 차(次)하위를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명확한 저발전 복지국가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복지지출수준은 약 9%로, OECD 평균(약 21.44%)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입안 및 추진은 사회복지관련 쟁점과 이슈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각 후보자들의 복지 비전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 없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에 의존하는 후보자들의 복지정책 비전은 한국 복지 재정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의 복지정책 비전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 및 재원마련방법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들간 인식과,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정책적 공약과 비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적 유사성과 차이점 검증은 통해, 자신들의 인식과 후보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오직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당선 후 폐기되거나 축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복지정책적 공약과 비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복지공약이 당선 후에도 폐기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핵심 복지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재원마련 방식의 현실성 및 지속가능성



복지정책적 공약은 대중들의 환심과 표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나 공약이행을 위한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하고 추상적인 선심성 공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복지공약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후보자들 간 토론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각 후보자들의 핵심 복지공약의 실현 가능성 뿐 만 아니라, 복지 재원 마련이 우리 사회의 다른 중요한 부분으로 투입되어야 할 재원의 감축을 가져오는지의 여부 또한 검증해 볼 수 있다. 또한, 복지정책 유지를 위한 재원마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이 5년간의 집권기간 또는 그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원고갈로 단순히 일회적인 복지에 머무를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후보 본인의 경험과 경력을 근거로 현실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 ▶ 후보자의 복지공약 실현을 통한 복지확대가 세금인상을 가져오는가?
- ▶ 그렇다고 한다면, 세금인상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유권자들의 세금인상에 대한 인식이 복지공약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게 할 복안이 있는가?
- ▶ 아니라고 한다면, 이 후보자가 제시하는 복지공약 재원유지방안의 현실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의 집중 검증 필요.

복지-여성 토론 의제 #2 <저출산·고령화 문제>	
<b>토론 의도</b>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져오는 사회문제 및 그 심각성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서의 정책 공약 평가
<b>토론 질문</b>	Q)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와 연관되는 문제로,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의 노령화 진행 속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 국가 중 뒤에서 4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sup>1)</sup>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약 1.3명으로, 세계 평균인 2.5명과 비교하여 거의 절반 수준이다. 물론,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비해 낮다. 그러나,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평균 출산율은 1.7명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이보다 현저히 낮다.

낮은 출산율과 연관되어, 한국사회의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3%에 해당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곧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층 인구를 앞지르게 된다. 2025년 즈음에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할 예정이며, 2040년에는 이태리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노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한국의

1) “출산율 세계평균 2.5명·한국 1.3명…‘꼴찌서 4번째’” (연합뉴스, 2016년 10월 19일자)

경제생산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많은 노령인구의 존재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 2000년에는 약 10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약 5.6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 2025년에는 약 3.4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7명당 1명의 노인 부양이 예측되고 있다. 이는 고령자에 대한 연금 및 복지비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소득대체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없는 한, 국민연금은 2060년경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셋째,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의 노인부양 부담이 커지면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노인부양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할수록 노인 자살율 등 사회문제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에 있어 압도적인 1위에 위치해있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0%를 육박하고 있어 OECD 평균인 15%의 세배가 넘으며, 노인 자살율 또한 인구 10만명당 120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에 비해 6~7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하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후보들간 인식의 차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언론 매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는 있으나, 그와 같은 위기의식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즉, 1.3명 정도의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그와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다는 논의들도 있으며, 노령화 또한 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확대로 자연스러울 뿐 만 아니라 노인들이 병약하고 의존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에 활발하게 공헌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논의들도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따라서, 후보들 각자의 판단에 근거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후보들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양육부담 때문에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혼인연령이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청년실업 또는 열정페이 존재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셋째, 교육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각 후보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들간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공약은 무엇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에 노출된 지 오래 되었으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통해 후보자들의 의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역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왜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는지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이를 통해 과거 정책과 차별적인 공약의 제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각 후보자들의 정책 대안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은?

복지-여성 토론 의제 #3 <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	
<b>토론 의도</b>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한 후보의 문제의식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
<b>토론 질문</b>	Q)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일·가정 양립은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 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지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일과 육아, 가사노동을 모두 책임지는 슈퍼맘이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데,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데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지난 해(2016년) 국내 출생아 수는 40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었습지만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국의 출산율은 2016년 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주택, 의료, 노동시장의 개혁만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생활과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같은 가정 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그리고 기혼뿐만 아니라 미혼 근로자까지 논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개념적으로는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이나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으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직 한국은 정책적 측면에서 일·생활 균형보다는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임신, 출산, 자녀 양육기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함으

로써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대표적인 정책으로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이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포함됨으로써 일·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또 다른 목표를 갖게 되었다.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이 강화되고 인식이 개선되면서 산전·후 휴가제도의 활용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률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들에게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들은 ‘그림의 떡’이다. 이들이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직장문화나 일하는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경쟁’과 ‘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 야근은 일상화되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과 가족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고, 출산율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결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으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부성권 보장, 장시간 근로조건 개선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그러했듯이 보육정책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제외하고 여성정책으로 주변화되어 있다. 더욱이 현실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방향과는 반대로 직장에서 점점 더 강도 높은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정 속에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기 어렵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복잡하고 포괄적이므로, 후보들이 과연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기존 정책의 문제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일·가정 양립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들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자녀양육과 일의 양립을 위해서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시설·가정·직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자녀돌봄이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실 수요자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의 내실화 방안은 무엇인가?
- ▶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8.5%만이 남성일 따름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여명이지만, 육아휴직을 한 아빠는 1%에 미치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 확대, 장시간 근로 개선,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와 정규직 대신 여성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복지-여성 토론 의제 #4 <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 >	
토론 의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대하고 있지만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의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 후보자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 및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
토론 질문	<p>Q)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 불평등 해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p> <p>이미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의회와 내각,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고위직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원 등 공직의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p> <p>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공공부문 고위직 진출을 제고하기 위해 후보자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의 ‘정치 권한’ 부문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92위를 기록했고, 경제분야의 ‘관리자 비율’은 114위로 매우 낮았다(World Economic Forum, 2016).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국가 성평등지수에서도 보건분야, 복지분야, 가족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안전분야, 문화정보 분야, 경제활동 분야, 의사결정 분야 등 총 8개 분야(각 100점 만점) 가운데 ‘의사결정’ 분야가 25.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치분야에서는 그간 2000년 정당법 개정으로 비례대표후보 할당제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으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대표성은 저조하다. 2016년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51명)로, 같은 시기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성 국회의원이 40%가 넘는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02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라 여성관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



무원·교원 등 공직사회의 고위직 여성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행정자치부(2017.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 중 여성은 지난해 6월 기준 12.1%(2,617명)에 불과하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6.0%(54명)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낮아져 고위직 승진에서 여성 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교원도 마찬가지다. 초중등 교원의 약 70%가 여성이지만, 교장·교감 비율은 현저히 낮다. 또한 국공립 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2013년 기준 13.1%로, 사립대 여교수 비율 23.1%보다 더 낮다(국공립여교수회연합회 2017. 3).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명기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 정치인 비중을 늘리는 한편, 내각,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등의 여성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대한 후보들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정치 분야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여성 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이행조치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성별 대표성 제고와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 각각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구체성을 검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2) 여성 공무원과 교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 비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고위직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여성 공무원과 교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6~9급 여성 공무원 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교원이나 공기업의 관리직에서도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공공부문 의사결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정책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기업)의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해 여성 승진할당제 도입, 주요 보직 배치 시 성 균형 고려, 정부의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각 정책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동의 혹은 반대의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
  
- ▶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사립대 여교수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13.1%에 불과하다.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의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

<b>교육-과학-환경 토론 의제 #1</b> <b>&lt; 장기적 교육정책의 수립과 실행 &gt;</b>	
<b>토론 의도</b>	<p>정권 교체와 함께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 온 지금까지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p>
<b>토론 질문</b>	<p>Q) 예부터 십 년 계획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고, 백 년 계획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포되는 교육정책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보다 불안감을, 학교 현장에서는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의례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p> <p>교육정책은 현장에 과급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그 어느 정책들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들의 교육정책들을 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의 교육정책은 재고의 여지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어떤 정책은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도 못한 채 다른 정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p> <p>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들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포되는 교육정책들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교육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교육현장의 진정한 변화로 연결되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때 흔히 거론되는 백년지대계가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본래 의미와 다르게 활용되는 것 같다. 교육은 모름지기 상당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므로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잘 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 혹은

아직은 모르기에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책임에서 자유로운 정치 공약으로 활용되는 것이 그것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매력적인 문구로 치장된 교육정책 슬로건들, 하지만 현란한 정책에 비해 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까지 1년이 걸렸고, 고교무상교육은 2016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씩 뒤로 미뤄다가 슬그머니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여기에 고교 학비 지원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극심한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애꿎은 피해를 봤던 누리과정의 경우도 예산 부담의 책임을 정하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으로 미봉해놓은 상태다. 초등 방과후 학교 무상화 정책 역시 수익자 부담 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 학교 활동비가 2012년 총 7020억원에서 2015년에는 9414억원으로 34.1% 증가해 공약과 역행했다(한국교육신문 2017.03.17).

사교육 절감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5월과 9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1483개 초·중·고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정책 효과까지 평가 가능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교육정책의 실패라고 정리해버리기보다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일관된 방향으로 기울여지지 못했다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교육정책은 그 어느 정책들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숙고하여 설정한 후,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 효과성 검증과 함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교실 현장으로까지 파급되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느냐에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1)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포되는 교육정책들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후보들간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역대 교육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진정한 변화로까지 전개되지 못했던 근본적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2)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교육 현장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교육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교육현장의 진정한 변화로 연결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과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교육적 철학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중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교육 정책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가 치밀한 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검증되어야 할 요소이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무엇이든 평가할 것인가?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 교육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주된 역할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b>교육-과학-환경 토론 의제 #2</b> <b>&lt; 4차산업혁명과 교육 정책 &gt;</b>	
<b>토론 의도</b>	<p>후보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는 지,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함</p>
<b>토론 질문</b>	<p>Q)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지금껏 변화해온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할 것입니다.</p> <p>일례로 올해 1월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6 다보스 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과 미국의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동 연구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는 대신 200만여개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고, 현재 전 세계 6세 아이들 중 약 65%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오늘날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사회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반영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들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속하게 변화하는 오늘날 한국교육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2)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에 비추어 구상하고 계시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중요성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미래 사회에 요청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는 데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연구는 그 누구도 미래 사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현재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

화하는 연구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것은 세계 교육 선진국들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과업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사회에서 요청되는 능력이나 기술은 현재에서 요청되는 그것과 다를 것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갔을 때 뒤처지지 않게, 또는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미래 사회를 이끄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다.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움직임이나 (e.g. 핀란드의 Foresight 2030, 싱가포르의 21<sup>st</sup> Century Competencies), 정보의 홍수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OECD, 2015)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한국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 분야에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무대에서 경쟁 또는 협업하는 시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학교 교육의 체계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후보자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 개혁 방향은 매우 중요한 토론 주제가 아닐 수 없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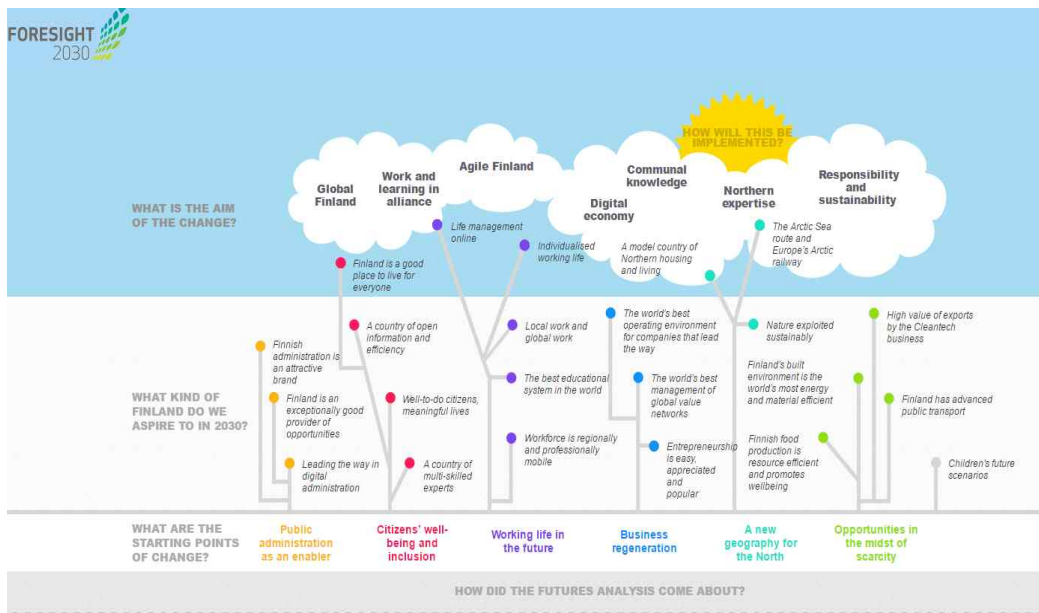
1) 4차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급속하게 변화하는 오늘날 한국교육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후보들의 인식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후보자들은 평소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의 실행 현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평소 학생, 학부모, 학교 구성원,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교육이 현재 관점에서 아무리 최선이라고 해도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된 사회에서는 그리 큰 유용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단 학교 교육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님에도 미래 사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학교가 사회의 한 기관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생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에 비추어 구상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교육 혁신을 위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여 타당한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를 위해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제시하는 정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리한 예측과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변인 고려, 그리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교육 선진국들의 노력을 분석하는 데 달려 있다. 아무리 멋진 정책이라 해도 그만한 재정과 노력을 투자하기에 아깝지 않을 만큼의 중요한 정책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는 후보자들의 부연 설명을 통해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그림 1]은 핀란드 정부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설정한 Foresight 2030 중 교육개혁 방안이다.

[그림 1] 핀란드의 Foresight 2030 중 교육개혁 방안 (출처: <http://tulevaisuus.2030.fi/en/>)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이외에도, 교육 개혁 방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한국의 미래 사회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 개혁 방안을 설계할 때 주력해야 할 교육 정책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변화와 가치는 무엇인가?



교육-과학-환경 토론 의제 #3 <과학기술 역점분야>	
토론 의도	과학기술 역점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 질문	Q) 후보자께서는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육성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점은 계승하고 어떤 점은 개선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은 거대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경제는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의 선도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의 기치 하에 융합과학과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후보자들의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토대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차기 정부가 육성해야 할 과학기술 역점분야에 대한 후보간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공약의 현실성은?

현재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역점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분야를 역점으로 삼게 된 구체적 이유에 대한 토론을 통해 토론회를 시청하는 유권자들과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점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공약의 현실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예산조정인지 토론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 2)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으로부터의 지속성과 단절 및 개선 방향

과거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부 교체시마다 단행되는 과도한 변화 또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에 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과학기술 역점분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공약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연속성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또한 이슈의 쟁점이 될 수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후보자가 제시한 과학기술 역점분야 발전을 위해 ① 정부주도의 Top-down식 분야 및 의제 선정을 통해 대학 및 연구소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② 민간주도의 Bottom-up식 선정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보조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 접근법 중 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할 접근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제시 필요.
  
- ▶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에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가? 또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장가치만을 기준으로 제시된 과학기술 역점분야 선정은 보건-복지-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기술의 상대적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연구 분야의 차이에 기인하는 이른바 ‘연구계의 빈부격차’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환경 토론 의제 #4 <신재생에너지>	
<b>토론 의도</b>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아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증
<b>토론 질문</b>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석탄과 석유의 비중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시고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육성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신에너지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있으며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2°C에서 1.5°C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을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4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9.1%이었으며 일본, 미국,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4.9%, 6.5%, 11.1%였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은 점차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공급에너지의 95.2%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총 에너지 수입액의 74.6%를 차지하는 석유는 중동의 수입비중이 83.9%에 달한다. 이러한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해 2020년까지 4,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규모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45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는 2014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540억 달러가 투자되어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 투자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파리협정의 발효로 인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고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20%에 불과했던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2020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 발굴이 필요한 정부는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은 2007년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지만, 2014년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할 때 정부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중동 원유에 의존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은 무엇인가?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부상하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생산량은 중국 및 주요 국가들의 경쟁에서 뒤처져있는 실정이다.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약 5% 수준에 불과하며 풍력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이 실적 부족으로 막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풍력시장에서도 외국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밀려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리협정 발효 이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2016년 7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증강하는 전력수요를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LNG는 상대적으로 가동비용이 높기 때문에 발전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 많은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철새도래지가 훼손당하고 지역주민들과 가축들이 소음과 전자파의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들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 산업부가 발표한 ‘원자력 발전량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체 발전량의 37.5%가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원자력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혀주시고 원자력 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토론 의제 #1 <외국인 범죄문제와 사회통합>	
토론 의도	외국인 범죄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책을 어떤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범죄문제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토론 질문	Q)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범죄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 범죄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구 대비로 범죄율을 계산해서 외국인 범죄율과 전체 범죄율을 비교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외국인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보다 대체로 낮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일반의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은 직접적인 경험보다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간접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에 의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 등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크게 좌우하기도 한다. 실제로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율이 전체 범죄율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외국인 범죄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파악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안그래도 지역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등 많은 갈등 요소들로 사회통합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문제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통합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쩌면 외국인 범죄 그

자체보다는 외국인 범죄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외국인 범죄와 이에 대한 내국인의 편견 형성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차별은 외국인 범죄의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국제적인 추세로나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그리고 노동구조와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경향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외국인 범죄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의 문제 요소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외국인 범죄문제 보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통합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외국인 범죄문제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외국인 범죄문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들이 외국인 범죄문제를 이민자 문제로 확장시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이해가 정책 방안으로 연결될 정도로 구체적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외국인의 상당 부분은 재종교포들이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공통적인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후보들이 외국인 범죄문제를 다문화사회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다.

### 2)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가?

외국인 범죄문제는 그 자체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형성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책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범죄문제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책 방향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킴으로써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후보들이 외국인 범죄문제와 사회통합 문제 사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려하며 정책적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사회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의 깊이와 정책적 감수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과 노동력 수급문제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외국인 범죄문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남한거주 북한주민에 의한 범죄문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상당수가 재중 교포임을 고려해 볼 때, 재중교포에 의한 범죄 및 이에 대한 인식이 통일한국 북한주민에 의한 범죄 및 이에 대한 인식과 유사할 확률이 크다. 현재의 외국인 범죄 및 사회통합문제를 통일이후의 상황을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문화 토론 의제 #2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토론 의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대형재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과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토론 질문	Q)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지난 정권의 무능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형재난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대형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그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대형재난 사고의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대형재난 사고의 규모와 그 위험은 더 커진다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재난 사고의 발생의 어쩔 수 없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예방과 대책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후자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재난대응 관련 법규 정비’, ‘안전 관련 예산 및 조직 강화’, ‘부처 간 정보공유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재난 또는 위기관리 대응 체계 정비’, ‘재난대응 전문가의 양성’ 등의 대책을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그 구체성에서 미진하며 실질적 효과도 의심스러워 보인다.

후보들이 현대사회의 대형재난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형재난사고의 예방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보여준 교훈을 얼마나 잘 새기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모범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예방 대책과 대응 방안을 얼마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지를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대형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와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체계는 어떻게 구분되며 연결되는가?

대형재난사고의 예방과 대응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전체 사회 시스템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면서도 그 관련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의 무능은 상당 부분 이러한 구분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답을 통해 특히 대형재난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의무를 얼마나 명확하게, 그리고 무겁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대형재난 사고를 유형별로 적절히 분류하여 그 예방과 대응방안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가?

대형재난사고의 위험성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형재난사고의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하며,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위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새로운 유형의 대형재난사고에서 또다시 지난 정권의 무능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지식과 인식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앞으로 대형재난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특히 커서 특별히 주목하여 예방에 힘써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있는가?
- ▶ 대형재난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중앙부처, 지방정부 별로 나누어 정책을 제안하고 그 관련성을 정리해 줄 수 있는가?

사회-문화 토론 의제 #3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토론 의도	우리나라의 자살문제를 다른 근본적인 사회문제들과의 관련성 하에서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토론 질문	Q)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살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자살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벌써 10년 이상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살률 문제는 단순히 ‘자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며, 경제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자살을 개인병리의 문제로 치부하는 피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이러한 대책들이라는 것이 별 효과가 없음을 지난 20여년 간의 자살률 통계가 웅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쩌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살의 문제를 이처럼 안이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후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후보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고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차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헬조선’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반증하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살기 힘들어 하는지를 후보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경제문제를 주로 이야기 할 것이다. 물론 경제는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떠한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 정책들과의 일관성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나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의 관련성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후보들 간의 비교가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자살예방 대책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가?

먼저 앞서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대책을 근본성과 구체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을 적절히 고려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후보들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후보들의 대책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효과적일지에 대한 비교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기존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후보들의 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기존의 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후보에게 추가질문) 국민들의 높은 자살 선택의 원인이 오직 경제적 문제 때문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사회-문화 토론 의제 #4 <다문화정책>	
토론 의도	국경을 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사회도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다문화정책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Q) 대량의 사람, 정보, 자본, 물자 등이 빈번하게 국경을 넘는 글로벌시대에 특히 사람의 국간 간 이동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한국사회도 200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점차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법’을 각각 제정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단일민족에 기초한 ‘순혈주의’사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글로벌시대의 특징인 대량의 사람, 정보, 자본, 물자 등의 빈번한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각국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1980년대 이후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해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장기 체류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180만명에 달해 전 인구의 3.5%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30여만 세대로 0.6%를 넘고 있음이 이를 웅변해준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제정된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사람들과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법’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주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 ‘순혈주의’사회에 머물고 있다. 이는 뿌리깊은 단일민족의식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에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이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한국사회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차별없고 인권이 옹호되는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다량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시대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전 인구의 약 3.5%에 달하는 18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0.6%에 정도인 30여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군대에서도 다문화 출신 병사 1,000여명이 현역병으로 복무했거나 복무하고 있어 2011년 군은 장교 임관선서와 병사 입대선서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국민’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도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다수의 외국인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 다문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7년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을,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법’을 각각 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 또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기념일이다.

다문화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서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

### 2)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아직도 단일민족사회에 기반한 강력한 한국사회에의 동화주

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민 또는 그 자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화합하여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그들과 대등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사회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차별없고 인권이 옹호되는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한국사회가 앞으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리를 도외시한 제도 운영, 외국인 배우자,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 등의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이들의 열악한 상황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미처 눈여겨보고 손쓰지 못한 이주자 인권에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회-문화 토론 의제 #5 <한류정책>	
<b>토론 의도</b>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한류는 국제문화교류의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한류의 현황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인식과 앞으로의 한류 확산을 위한 정책 검증
<b>토론 질문</b>	Q) 국제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급성장한 한류는 단지 국제문화교류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한국산업의 성장동력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류는 아시안권을 넘어 유럽, 미국,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류 확산에 대한 견제로 반한류, 혐한류, 항한류, 역한류 등 상대국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주춤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후보들께서는 한류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한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제 선정 배경 및 의도

한류는 글로벌시대의 문화현상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 현상이 아니다. 한류의 영역은 대중문화를 넘어 전통예술과 문화는 물론 스포츠, 의료, 관광, 식품, 패션, 성형, 헤어, 일반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넓어지고 있다. 즉 한류는 이제 문화교류를 넘어서 문화산업으로 성장한 지 오래이다. 지역적으로도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국,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왔다.

이와 같은 한류의 영역과 지역적 확대에 따라 한류의 파급 효과 역시 급증하고 있다. 민간에 의한 문화교류에서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 향상으로 인해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국가의 이미지 제고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산업과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그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류 현상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류 확산에 따른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첫째는 주로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상대국과의 갈등, 마찰, 편견, 오해, 편견 등이다. 둘째는 산업 측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차하면 무역 역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상대국과의 반한류, 혐한류, 항한류, 역한류 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문화교류에 있어 상대국의 문화를 배려함으로써 갈등, 마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산업의 고도화와 콘텐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민간과 기업이 앞에서 말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류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뒤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한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한류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이슈 쟁점 및 토론 논점

### 1) 글로벌시대의 한류의 성격은 무엇인가?

국가 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진 글로벌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정보, 자본, 물자 등이 국경을 자유로이 대량으로 넘나드는 현상이다. 이는 넓은 의미의 문화교류로 볼 수 있는데 한류는 바로 이와 같은 글로벌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다. 한류는 처음에는 주변 아시아 국가를 사이에서 단순한 문화교류에 머물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으로 성장해 갔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우선 한류가 글로벌시대의 대표적인 문화현상임을 이해하고, 다음에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문화산업으로까지 발전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2) 한류가 직면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정책은 무엇인가?

한류가 그 영역을 넓히고 지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문화교류의 측면에서는 한류가 유입됨에 따라 한국과 상대국과의 사이에 갈등, 마찰, 편견, 오해, 편견 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무역 역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민간은 문화교류에 있어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마찰, 편견, 오해, 편견 등을 미연에 막

고 기업은 고도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수익 확보를 위한 선순환 투자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한류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이와 같은 한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3. 연관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한류가 비교적 단시간에 주변 아시아지역에서 유럽, 미국,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지구적 규모로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은?
- ▶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소위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중국에서의 한류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 V.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단 명단

구 분	명 단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의제개발 프로젝트: 참여 연구진</p>	<p>&lt;정 치&gt; 서정건 경희대학교(책임연구원) 이재목 한국외국어대학교</p> <p>&lt;외 교&gt; 이상신 통일연구원 황태희 연세대학교</p> <p>&lt;경 제&gt; 강신구 아주대학교 김동훈 고려대학교</p> <p>&lt;사 회&gt; 노정호 국민대학교 박현석 KAIST</p>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의제개발 프로젝트: 전문가 자문단</p>	<p>&lt;정 치&gt; 김의영 서울대학교 민 희 경희대학교 박원호 서울대학교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p> <p>&lt;외 교&gt; 백우열 연세대학교 서창록 고려대학교 우병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환 서울대학교 최우선 국립외교원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p> <p>&lt;경 제&gt; 김용복 경남대학교 정하용 경희대학교 한승헌 KAIST 한영빈 서강대학교</p> <p>&lt;사 회&gt; 권순미 고용노동연수원 김동명 국민대학교 신동준 국민대학교 유솔아 연세대학교 정수현 명지대학교</p>